

미국 불체자 시민권 주나



Cover story 2021 미국 시민권법안

8년 걸쳐 1,100만명 불체자에 시민권
2021년 1월 현재 미국 거주자
세금 내고 범죄 없으면 영주권 후 귀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 밝힌 1100만 명의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에게 8년간의 일정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2021 미국 시민권법안' (US Citizenship Act of 2021)이 구체화되고 있다. 멕시코 이민자 가정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10명이 하원에 공식 법안을 상정했다. 여기에는 현재 진행 중인 '불체 학생 구제안' 인 DACA의 혜택을 더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미국은 레이건 이후 또 한차례 불체자 대 사면을 단행하게 된다. 레이건은 1986년 11월 6일 3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체자를 사면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원안대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상원 본회의에 상정되려면 60명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하지만 공화당의 반발이 심해 표 확보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정섭 기자 4·5면에 계속

그래픽: 유재일



Cover story

2021 미국시민권법안 4·5면

medicare

오픈 인롤먼트 피리어드 이용 8면

interview

차민영 서울메디컬 그룹 회장 9면

IRA

노후 챙겨주는 자녀에게는? 11면



Social security

소셜연금 세금 계산하는 방법 13면

special issue

코비드 백신관련 일문 일답 14·15면

education

FAFSA 개혁 18면

culture & art

이경수의 미술이야기 24·25면

column

김동희 칼럼 26면

풍부한
경험
성실
신뢰

제인 김 CPA
(323) 840-3238

전 남가주 한인 공인 회계사 협회 회장

예술의 향기가 있는 곳

lee & lee Gallery

(213) 365-8285

3130 Wilshire Blvd #502,
Los Angeles, CA 90010

US **metro news**

usmetronews@gmail.com

매월 첫번째 목요일 선보이는 'US 메트로 뉴스'는 생생한 정보, 유익한 읽을 거리와 따뜻한 소통, 맛있는 이야기를 담은 웰빙가이드입니다.

광고·구독·배달: (323)620-6717

서울 메디칼 그룹 메디케어 HMO의 추가 혜택에 대해 알아보까요?



보험에 가입하시기 전에 **전문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p>1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치과</p> <p>2 <input checked="" type="checkbox"/> 침술</p> <p>3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경</p> <p>4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청기</p> <p>5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의약품 (OTC)</p> | <p>연간 리미트 \$1500 선에서 다양한 치과 진료 혜택 보장
코페이 \$0 정기 체크인
(메디케어 HMO 플랜 보험회사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p> <p>오리지널 메디케어로는 커버가 안 되는 침술과 카이로프랙틱이 일부 플랜은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연간 평균 18회 제공 (보험사에 따라 24~36회 까지 보장)</p> <p>대다수 안경테 (\$200 까지), 렌즈, 눈검사 등 전체 보장
(코스트코, 계약되어 있는 다수의 한인 안경점)</p> <p>귀 안에 쏙 들어가는 최신 보청기 보험 플랜에 따라
\$1000 ~2000 까지 보상</p> <p>보험사 플랜마다 다르지만 3개월에 \$100 정도
현금을 데빗카드에 입금
진통제 부터 파스, 각종 건강보조식품 등 처방약이 아닌
제품을 위한 OTC 구매 지원 제공</p> | <p>6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외 여행시 응급치료</p> <p>7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량 제공</p> <p>8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운동</p> <p>9 <input checked="" type="checkbox"/> 발기부전 치료제</p> <p>10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혜택</p> | <p>오리지널 메디케어로는 커버가 안 되는 메디케어 HMO 플랜에 따라 적은 곳은 5만 달러에서 많은 곳은 100만 달러까지 커버</p> <p>고령의 시니어가 병원이나 주치의 방문 시 필요한 교통편 제공. 연간 리미트 24회까지
(메디케어 HMO 플랜 보험회사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p> <p>“실버스니커즈” 연계된 24시간 피트니스, YMCA 등 전국 1만 4000여 곳의 유명 피트니스 센터 무료 이용
(보험사 플랜에 따라 골프비용 한달에 \$45 씩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p> <p>주치의 처방시 매달 4~6 알의 발기부전치료제 (바이아그라, 시알리스) 제공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품과 거의 동일한 효능의 제네릭 치료제가 제공</p> <p>어떤 플랜은 퇴원 후 3~5일간 식사 자택으로 배달
당뇨 시니어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인 프리스타일 리브레 제공 등</p> |
|---|---|---|--|



3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 진료 수준
최고 5성급 메디칼 그룹

휴매나

웰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앤섬 블루크로스

센트랄헬스 헬스넷

브랜드 뉴데이 스캔

블루실드 얼라이언트

에트나 클레버케어 애스티바

LA 지역 213.389.0077 OC 지역 714.367.6867

90% 이상의 한인 의사들이 서울 메디칼 그룹에 가입되어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올해 62세 1959년생 소셜 연금 신청 가능

소셜시큐리티 베니핏(Social Security Benefit·이하 소셜연금)을 언제 신청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는 한인들이 많다. 소셜 연금은 늦게 신청할수록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실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거나, 질병으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면 일찍 받는 게 당연할 것이다.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인간 수명을 쉽게 짐치는 힘들다. 소셜연금은 한번 신청하면 그 금액을 평생 받는다. 만약 일찍 신청하면 적은 금액을 평생 받을 것이고 늦게 신청하면 큰 금액으로 좀더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국 소셜 연금은 그동안 평생 벌어왔던 월 평균 수입, 인플레이션 조절률, 35년간 세금 보고 기록, 여기에 몇 살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미국인 40%는 은퇴 후 소셜 연금에만 의존해 살아간다. 소셜 연금 신청 시기는 은퇴 후 생활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잘 판단해야 한다.

소셜 연금 62세부터 신청

1959년생은 올해 62세다. 올해부터 소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다.

62세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소셜 연금을 신청하는 나이다. 남성의 35%, 여성의 40%가 이 시기에 연금을 신청한다. 두 번째로 많은 신청 나이는 만기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FRA)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은퇴에 합류하는 베이비 부머들의 비교적 안정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조기 신청 비율이 점차 떨어지는 추세다.

1959년생이 올해 신청한다면 FRA에 받는 돈보다 대략 30%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예를 들어 FRA에 100% 받을 연금을 지금 받으면 70%만 받는다.

1959년생의 FRA는 66세 10개월(2025년)이다. FRA에 연금을 신청해야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100% 받는다. 그런데 70까지 받지 않고 연기한다면 2029년 매년 8%씩 복리로 늘어나 FRA때보다 28%가량 더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62세 때 받는 금액과 70세 때 받는 금액의 차이가 거의 60% 이상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면 왜 많은 미국인이 62세부터 돈을 받으려고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건강 우려와 조기 은퇴에 따른 재정적 압박, 그리고 미국 소셜 연



미국인 여성 40%, 남성 35% 62세부터 시작
1955년생 만기 은퇴 연령, 1951년 70세 도달
조기 신청하면 연금액 최고 35% 줄어들어
재정상태, 건강, 배우자 수입 유무로 시기 결정

금 시스템의 붕괴 우려 때문이다.
◇신청 시기에 따라 금액 달라져
소셜 연금은 FRA를 기준으로 한다. FRA를 100으로 본다면 FRA보다 일찍 신청하면 첫 36개월(3년) 동안은 매달 1%의 5/9가 깎인다. 즉, 62세부터 65세까지는 매년 약 6.7%씩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36개월이 지나서 FRA까지는 매달 1%의 5/12씩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 대략 5%씩 줄어든 것이다.

일단 FRA에 도달하면 삭감 없이 100% 소셜 연금이 지급된다. 이후부터는 매달

1%의 2/3씩 불어나 연평균 8%의 이자가 가산된다.

예를 들어보자. 영희 씨는 2021년 62세다. 영희 씨가 만기 연령인 66년 10개월에 받는 돈이 2,000달러로 가정한다면, 영희 씨가 올해 62세에 신청하면 대략 1,450달러를 받는다. 영희 씨가 평생 받게 될 연금이다. 하지만 영희 씨가 70까지 기다린다면 28%가 더 불어나 대략 월 2,600달러를 받는다. 금액 차이가 무려 1,000달러를 넘는다. 만약 영희 씨가 70세부터 받기 시작해 89세까지 살 수 있다면 영희는

62세 때부터 받는 금액의 총합계보다 11만4,000달러(24%) 더 많이 받고 죽는다. 노년에 상당한 금액이며 인플레이션까지 계산한다면 금액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는 계산이다. 그러면 일찍 받는 것과 늦게 받기 시작한 연금 총액이 동일한 시점을 계산해보자. 이를 '블랙 이븐 포인트'(Break Even Point)라고 부른다.

만약 영희 씨가 62세에 1,500달러를 받기 시작할 때와 66세에 2,000달러를 받았을 때를 가상해 계산한다면 77세가 되면 두 연금 총액이 동일 해진다.

◇배우자 소셜 연금

배우자 기록으로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날까. 미국에서 일한 경험이 없거나, 일을 했어도 조금밖에 하지 못한 배우자, 특히 여성들도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본보 2월호 참조). 배우자 연금은 근로 기록이 있는 남편 또는 여성이 FRA에 받는 금액의 최고 50%까지 받는다. 최고 50%까지 받으려면 배우자 역시 FRA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이전에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나이만큼 금액도 줄어든다.

만약 철수 씨가 부인 영희 씨의 기록으로 배우자 연금을 받는데 62세에 신청한다면 부인이 FRA때 받는 금액의 최고 35%까지만 받는다. 예를 들어 부인이 FRA때 받을 돈이 2,000달러라면 철수 씨가 62세 때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경우 월 675달러를 받게 된다. 철수 씨가 FRA때 받는 돈보다 33%가 줄어든 금액이다.

◇1955년생은 올해 만기 은퇴 연령

1955년생은 올해 66세 2개월의 만기 은퇴 연령(FRA)에 도달하며 아직 소셜 연금을 받지 않았다면 100%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70까지 미룬다면 매달 8%씩 불어나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연금을 평생 받으며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1951년생은 올해 70세

1951년생은 올해 70세다. 아직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4개월 전부터 신청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70세가 지나면 소셜 연금을 더는 불어나지 않는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70세가 지나도 세금 문제 등의 이유로 연금을 받지 않으면 소셜시큐리티국이 70세 이후 6개월 동안의 미수령 연금을 소급해 지급해 주지만 그 이후부터는 받지 않은 연금에 대해서 더이상 지급해 주지 않는다.

김정섭 기자

범죄자 규정도 완화돼 거센 반발 예상

Cover story 시민권법안

1면서 계속

민주당 사면안 골자

린다 산체스 연방하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당)과 밥 메넨데스(뉴저지·민주당)를 비롯해 10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총 353페이지에 달하는 ‘미국 시민권법안’을 지난 11일 선보였다.

이 법안은 크게 2개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66페이지 요약본에 따르면 ①임시 보호 신분(TPS) 소지자와 어려서 미국에 온 불법체류자에게 우선 영주권을 준 다음 3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②기타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자에게는 잠정 추방 유예와 함께 노동 허가를 준 후 8년간에 걸친 시민권 과정을 허용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선 미국에서 2021년 1월 1일 현재 합법적인 신분 없이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들은 5년 동안 임시 체류 신분 또는 노동 허가를 받는다. 이를 위해 범죄 기록 등 신원 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세금 보고를 하는 등의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단 5년간의 과정을 거치면 영주권을 부여하고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수백만 명의 불체자들이 IRS의 납세자 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이용해 세금 보고를 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택스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어 정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세금은 내는데 신분이 안돼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와 함께 현재 DACA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불체 학생들은 훨씬 빨리 시민권을 받도록 한다.

이번 사면 조치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 때 추방됐더라도 추방 전 최소 3년 동안 미국에 있었음을 증명하면 인도적 예외가 인정돼 사면안에 포함되도록 했다.

상원 필리버스터 통과 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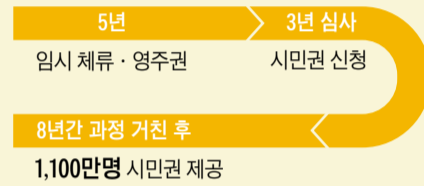
이 포괄적 개혁안이 민주당 다수의 하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원안대로 상원 통과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현재 50대 50으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하는 상원에 상정되려면 현행법상 민주당 50명의 전원 찬성과 공화당 최소 10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래

국경 경비 조치 미흡으로 보수 진영 반발 클 듯

바이든 이민 정책

(조건: 범죄 기록·신원 조회·세금 보고 충족)



이민 개혁 대상자

- 불법체류자
- DACA 드리머
- 임시 보호 신분 소지자
- 가족 초청 이민자로 미국서 임시로 있는 자
- 농장 근로자
- U 비자, T 비자, VAWA 비자 신청자
- 고아, 미망인, 어린이
- 미군에 조력한 외국 국적자
- 2차대전 당시 미국 편에서 싸웠던 필리핀계 참전용사
- 미명 신청자(미명 신청 1년 기한 조항 삭제시키려 함)

야 소수당의 법안 상정 저지 방안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고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상원 본회의에 상정만 된다면 무사히 상원을 통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공화당을 설득할 만한 국경 강화 등 방안이 첨부되거나 개별 법안으로 쪼개져 상정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타 예산안에 묶어 공화당 표를 확보하는 정치적 전략도 가능할 것을 보인다.

이에 따라 백악관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주도의 사면안보다는 공화당 주도의 조정안을 협의해 의회의 벽을 넘을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사면안이 백악관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 안에 의회의 비준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을 보인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 특히 하원 국토 안보위원회 존 케코(공화·뉴욕) 하원의원은 법안

자체가 하원 토의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징적 표현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격하했다.

법안에 실린 국경 경비안 강화안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하원에서 요구해 온 전략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결국 국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은 아니라고 그는 반박했다.

하지만 법안을 마련한 메넨데스 의원은 “도 아니면 모식의 법안은 아니다”라며 “1,100만 명 대신 200만 불체자 구제안부터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해 양당의 입장을 어우르는 합의안 도출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합법 이민 대폭 확대

이번 상정안의 또다른 골자는 합법 이민 확대다. 현재 배정된 국가당 가족 및 취업 이민 비자를 늘리고 사용하지 않은 비자를 재 배정해 나눠준다는 것이다. 또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가족의 영주권을 각국 배정 쿼터에서 제외시켜 이민 적체를 해소한다.

특히 취업비자 연간 할당량을 14만 개에서 17만개로 늘리고 연간 추첨 비자를 5만5,000에서 8만개로 확대한다. 또 지역 경제 개발에 일조하는 이민자들에게 제공하는 비자 프로그램에 1만개를 추가 배정한다.

과거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농장 노동자는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완전한 신분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혁안에는 중미 국가 범죄 예방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다. 중미로부터 미국으로 넘어오려는 이민 행렬의 주요 원인은 중미 국가의 범죄, 부패, 빈곤으로 비롯됐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바이든 행정부에 2022~2025년 연간 1조 달러를 배당해 중미 국가의 범죄, 부패, 빈곤 퇴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으로 오려는 중미 불체 행렬을 막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연방정부가 위기의 어린이를 포함해 중미 라틴계 이민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난민 처리 센터를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경 강화 방안도 일부 포함



꼭 기억하세요
호흡기증상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다카 청소년, 3년후 시민권 급행 가능

때 있지만 주로 불법 입국자 처리에 중점을 둔다. 국토 안보부에 '스마트' 국경 보안 방안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책정한다. 국경 입국 관리소에서 난민 신청자를 접수하고 불법 마약 밀수를 근절하는 인프라도 확대한다.

특히 국토 안보부는 이민 행렬을 저지하기 위해 실시돼 온 부모와 자녀의 분리 수용 정책을 금지시켜 미성년 이민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있다.

또 경찰이나 수사 당국을 돕는 중범 피해자를 위해 3만 개의 비자를 할당하고 미국 난민 신청을 하는 망명 시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폐지한다.

영주권 신청 도중 21세를 넘었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에이지 아웃도' 폐지한다. 또 과거 불법체류 기록에 따라 3년 또는 10년간 미국 재입국을 금지시키는 규정도 없앤다.

미국내 불체 인구 1,050만명

미국에 얼마나 많은 불법체류자가 살고 있을까. 권위 있는 조사 기구 '퓨 리서치 센터'가 2017년 미국 인구 센서스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미국내 불체 인구는 약 1,050만 명이다. 또 외국 태생으로 시민권을 받은 미국인은 3,500만명이고 1,230만 명은 영주권자, 220만 명은 임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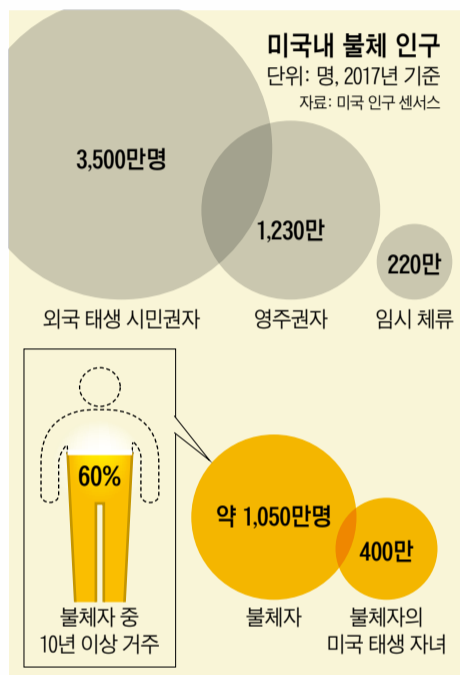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들의 60%는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미국 태생 자녀도 400만명에 달한다. 특히 이들이 미국 노동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5%다.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어나면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자동 미국 시민권자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기사에서 불체자 10명중 4명은 월경 입국자가 아니라면서 이들은 학생 비자 또는 취업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내전 등을 피해 자국을 도망쳐 나온 이주민들이라고 보도했다.

DACA 프로그램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미성년

미국 불법체류 전력자 3년·10년 재입국 금지도 폐지



자 추방 유예)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 체류 청소년들에게만 해당된다. 우리는 이들을 '드리머' (Dreamer)라고 부른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2021년 1월 1일 현재 합법 신분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다만 절차를 간소화해 3년 후면 시민권 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버락 오바마는 2014년 이와 유사한 DAPA(Deferred Action for Parents of Americans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를 시행한 바 있었다.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 부모는 추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2017년 행정명령 13768을 통해 DACA는 유지하되 DAPA는 폐지해 버렸다.

바이든 이민 개혁 대상자는

불법체류자·DACA 드리머·임시 보호 신분 소지자·농장 근로자·고아, 미망인, 어린이·2차대전 당시 미국 편에 서서 싸웠던 필리핀계 참전용사·미국 가족 초청 이민자 자격으로 미국에서 임시로 머물고 있는 사람·망명 신청자(망명 신청 1년 기한 조항을 삭제시키려 함)·U비자, T 비자, VAWA 비자 신청자·미군에 조력한 외국 국적자가 바이든 이민 개혁 대상이다.

과거 이민 개혁 노력

과거에도 수차례 이민 개혁이 논의됐지만 번번히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미국에서 마지막을 이민 개혁법이 의회를 통과한 것은 1990년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다. 그 후 이렇다할 이민 정책이 마련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불체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을 통해 봇물처럼 미국으로 들어왔다.

이민 행렬이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면서 불법 월경 단속에 대한 요구가 보수진영으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미국내 합법 근로 인력 부족과 난민 가족에 대한 문제 역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사회 문제로 대두돼 왔다.

30년 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계속됐지만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만족할 만한 법은 나오지 못하고 진통만 이어가는 형국이 돼 버렸다.

2001년과 2006년, 2007년, 2013년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대신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이민단속을 강화하는 절충안이 상정됐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들 법안에는 미국 임시 노동자수를 늘리고 망명신청을 담당하는 인력 충원, 고급 노동인력 확충, 가족 이민 제한, 어린 자녀를 동반한 불법 이민자 보호 등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나마 아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2006년과 절충안이 상원에서 부결됐고 2007년에는 상원의 벽에 막혀 주저앉았다.

2013년 오바마가 이민개혁안을 마련해 상원에서 68대 32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지만 당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 특히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반대로 하원 표결도 못해보고 역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4년 동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행정 명령을 통해 국경 장벽 등 다양한 반 이민 정책을 강행해 왔다.

합법 거주자는 개혁안에 포함 안돼

개혁안 주요 내용 일문 일답

이번 개혁안의 골자는 대상자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신분, LPI(legal permanent resident in the United State)를 받는 것이다. LPI는 6년 후 말소되지만 이번 케이스는 최소 5년 동안 유지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미국 법에 따라 신원조회를 거치고 모든 세금을 내야 한다. 영주권 발급 이후 3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게 된다. LPI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자국 여행도 다녀올 수 있다. 또 영주권 심사 중 추방도 막아 준다.

- 비이민 비자로 합법 체류하는 사람도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나

아니다. 미국에 임시로 거주하거나 방문자는 개혁안 대상이 아니다.

- LPI 신분을 신청할 수 있는 합법 비자 소지자가 있나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LPI 신분은 임시 농장근로자(H-2비자)와 미국 내 '필수적인 기반시설 노동 및 서비스에 종사하는 비시민권자에게 부여한다고 돼 있다.

- LPI 신분을 신청할 필요가 없는 그룹은

DACA 신청 자격자 또는 이미 이 프로그

램에 등록된 사람들, 미국에서 최소 5년 동안 농장 근로자로 일했다면 LPI 없이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3년을 기다린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 범죄자의 기준은
현행법으로는 기각된 범죄나 잘못된 조연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이 입증된 케이스도 이민 법정에서 이민 신청 자격을 제한한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에는 이를 완전히 없애 버렸다.

더 이상 이민 관련 자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3년 이상 경범죄를 저질렀거나 1년 이상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자로 간주한다. 다만 최소 10년 전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거나 5년 전 경범죄를 저질렀고 더 이상의 범죄자 없다면 더 이상 범죄자로 등록되지 않는다.

- 가족 초청은 어떻게 되나

V 비자를 확대해 이민 수속 중 가족들이 미국에서 함께 살며 기다리게 했다. 현재 V 비자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게만 국한했다.

- 3년, 10년 입국 금지 조치는 어떻게 되나
현행법상 미국에 불법으로 180일 이상 1년 이하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은 미국에 3년간 입국이 금지되고 1년 이상 불법 체류했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은 10년간 입국하지 못한다. 이를 아예 없애 버렸다.



바이든, 트럼프 이민 정책 뒤집기

트럼프 정부 DACA 무력화에 바이든, 구제 행정명령 서명 지난 10년간 정책 재검토 시사

이민 정책은 지금 막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민 이슈는 미국 건국 초기부터 꾸준히 의회의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0년간의 이민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하원과 상원 모두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개혁 의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

◇DACA(미성년자 추방 유예)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17년 당시 제프 세션 법무 장관이 추가 신청을 받지 않겠다면서 DACA 프로그램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4년 뒤인 2020년 6월 연방 대법원은 근소한 표 차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에 제동을 걸고 80만 명에 달하는 드리머들의 미국 내 거주를 허용하며 이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살려줬다. 바이든은 2020년 1월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드리머 청소년을 구제하는 법안 유지 및

보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슬림 국가 여행 금지
바이든은 트럼프의 무슬림 국가 여행 금지 차별법 역시 뒤집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무슬림 국민들의 미국 입국 금지 및 망명 이주를 금지했다. DACA와 함께 무슬림 국가 여행 금지 정책은 ACLU(미국시민자유연맹) 같은 인권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지만 2018년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손을 들어줬다.

◇ICE, 이민자 피난처 도시, 추방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공공안전 향상'이라는 이름의 행정명령 13768을 발동했다. 장기 불체자 및 드리머 가족의 추방을 강화하는 법이다. 하지만 많은 대도시가 연방 법무부의 자금 지원 중단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연방정부의 불체자 추방 작전에 협조하기를 거부했다. 이들을 이민자 피난처 도시라고 부른다.

바이든은 취임 첫날 이 행정명령을 뒤집었다. 바이든은 대신, 미국 국경 안전과 함께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비인간적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를 공언했다.

간단한 비자 상식

'U' 비자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하기 위해 가정폭력 또는 성 매매범죄를 감수하고 사는 이민자에게 주는 4년 또는 그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체류 신분증이다. 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U 비자 소지자 또는 직계 가족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V' 비자
미국 이민 비자 발급 과정을 기다리는 동안 가족들이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

도록 하는 비 이민 비자다.
'VAWA'
가정 폭력 및 기타 폭력 범죄 생존자를 위한 이민 구제 법이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부터 가정 폭력 피해를 당한 배우자, 자녀, 또는 미국 시민권자로부터 폭력 피해를 당한 부모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게 해 달라고 스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일도 할 수 있고 또 각종 정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웰빙 가이드
US 메트로 뉴스
진짜 정보를드립니다

특별한 월간 프리미엄 웰빙가이드 발행

고품질 월간 웰빙가이드 US 메트로 뉴스가 2월호부터 매월 첫째주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US METRO NEWS'는 최고급 웰빙 기사를 기대하는 독자 여러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새롭게 제작되는 월간 웰빙 가이드입니다. 프리미엄 웰빙 가이드 'US METRO NEWS'에는 정보제공에 목말라 있는 웰빙 전문가들과 함께 고급 정보를 놓고 함께 호흡하려 합니다. 독자 여러분께 고급 웰빙정보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US metro news

환자를 최고로 생각하고 치료하며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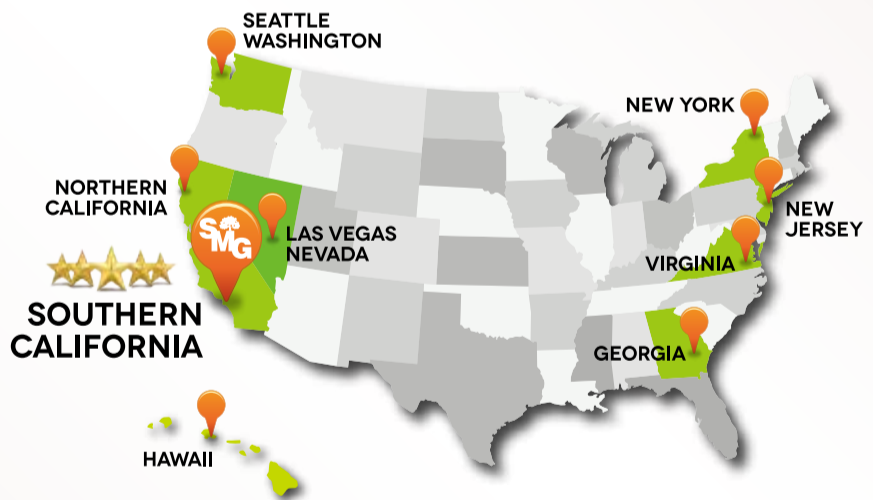

 2017·2018·2019·2020년


최우수 별 5개
서울 메디칼 그룹

BEST 4년 연속 선정
 환자 만족도 · 의료진의 진료 수준



배우 이순재



**시니어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최적의 의료 시스템 - 메디케어 HMO**

미주 전국 9개 지역의 4200명 의사 선생님들께서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LA 지역 213.389.0077
OC 지역 714.367.6867



OEP 기간의 기본 골자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 플랜) → 다른 파트 C 플랜
 - 파트 C 플랜 →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
 - 파트 C 가입자 → 플랜인 파트 D 가입하면 자동으로 C에서 탈퇴 오리지널로 갈 수 있다.
- ※처방전 플랜인 파트 D를 다른 파트 D로 변경하지는 못한다. 오직 파트 C만 변경 가능
- ※메디케어 에이전트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규정 숙지해야
- ※OEP 기간 중 플랜 변경 위한 마케팅 행위 CMS가 엄격하게 제한

“메디케어 플랜, 마음에 안든다면 지금 바꿔라”

‘오픈 인롤먼트 피리어드’ 기간중 다른 플랜으로 변경 가능
1월 1일~3월 31일 3개월 동안 단 한차례만 허용돼
파트 C에서 다른 파트 C로, 파트 C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

현재 가입해 있는 메디케어 플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올해 연말에 시작되는 정기 변경 기간(AEP)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오픈 인롤먼트 피리어드’ (OEP·Open Enrollment Period)를 이용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 메디케어 파트 C(Part C)라고 불리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Medicare Advantage Plan) 가입자는 마음에 드는 다른 보험을 선택하거나 같은 보험사내 다른 플랜으로 바꿀 수 있다. 또 파트 D(Part D)에 가입해 ‘오리지널’ (Original) 메디케어로 되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기회는 한차례뿐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보험 에이전트가 보험 변경을 유도하거나 선전할 수 없고 오직 가입자만 스스로 판단해 직접, 또는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OEP 기간의 기본 골자는 다음과 같다.
 ◇주치의의 선정하는 HMO 플랜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 플랜)을 다른 파트 C 플랜으로 바꿀 수 있다.

◇파트 C 플랜에서 나와 연방정부의 기본 메디케어 보험인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 파트 B)로 되돌아 갈 수 있다. 파트 C 가입자가 처방전 플랜인 파트 D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C에서 탈퇴해 오리지널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처방전 플랜인 파트 D를 다른 파트 D로 변경하지는 못한다. 오직 파트 C만 변경 가능하다.

◇메디케어 판매 에이전트는 메디케

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규정을 잘 숙지해야 한다. OEP 기간 중에는 플랜 변경을 위한 마케팅 행위를 CMS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OEP는 왜 필요한가
 주치의의 HMO 제도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라고도 부름)에 가입한 가

전국서 사용 가능한 ‘오리지널’ 지역 주치의 제도 ‘어드밴티지’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대부분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메디케어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전국 어느곳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오리지널’ (Original) 메디케어와 주치의 제도로 거주 지역 의료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Medicare Advantage) 플랜으로 나뉜다. 이를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이라고도 부른다.

얼핏 듣기에는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오리지널’ 메디케어가 더 좋아 보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유지하려면 별도의 처방전 플랜인 ‘파트 D’에 가입해야 되고 또 연방정부에서 지불해 주지 않는 코페이먼트와 디

입자들은 종종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 플랜에 불만을 느끼곤 한다.

플랜마다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요약본으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가입자들이 전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다. 가입자들은 적용되는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또 플랜내 의사 네트워크에 자신이 원하는 의사가 없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가 매년 초, 딱 한차례 마음에 드는 플랜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OEP는 사실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 (ACA) 이전까지 시행돼 오던 제도였지만 ACA 이후 폐지됐다. 2010년 제정된 ACA는 기존의 메디케어 OEP 규정을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C 플랜에서 나와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바꿀 수 있도록 한정했다.

더이상 파트 C 플랜을 다른 플랜으로 변경하지는 못하게 했다. 하지만 2019년 다시 원래의 OEP가 부활하면서 그해 첫 3개월동안 한차례에 걸쳐 플랜 변경이 가능해진 것이다. 자넷김기자 **22면에 계속**

메디컬 그룹 잘 고르면 좋은 의료 서비스는 덤

닥터블, 그리고 20%의 자기 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보충 보험, ‘메디케어 서프리트먼트’ (Medicare Supplement·일명 메디갭)에 가입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갖추려면 보험료가 메디케어 파트 B(148.50달러)를 포함해 450달러는 족히 들 것이다.

이런 보험료를 감당하려면, 빈곤층에 제공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을 받지 않는 한 일반 은퇴자들은 큰 부담을 안고 비용을 조달해야 한다.

개인의 비용 부담이 많은데다가 의료비용 오남용이 문제되자 연방정부는 일반 건강보험 회사들과 손잡고 주치의 제도인 HMO 시스템을 도입한 메디케어 파트 C를 운영하고 있다. 파트 C는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은 일반 건강보험사들이 운영하는 메디케어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병원비를 커버해주는 파트 A와 의료비를 책임지는 파트 B, 처방전 약품 혜택을 제공하는 파트 D, 그리고 일부 보충보험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다. 환자가 선택한

주치의가 환자의 모든 건강상태를 파악하며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HMO 파트 C의 비용은 저렴하다. 대부분 대도시 지역의 메디케어 파트 C 보험료는 ‘0’ 이거나 낸다고 해도 십여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파트 B 보험료(2021년 148.50달러)를 낸다고 해도 오리지널 메디케어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보험료로 질 좋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안경, 보청기, 침술,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일반 의약품 등의 추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파트 C 보험 선택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주치의와 메디컬 그룹이다. 메디컬 그룹에 따라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가 대부분 결정되기 때문이다. 규모가 어떤지, 그리고 전문의 진료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잘 고려해야 노년에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00% 전문의 리퍼럴로 환자 건강 책임 진다”

HMO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파트 C)에 가입할 때는 “어느 보험회사냐” 보다 “어떤 메디컬 그룹”을 선택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메디컬 그룹에 따라 가입자의 질병 예방과 관리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인 최대 메디컬 그룹인 서울 메디컬 그룹(SMG)의 차민영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보험회사에서 환자의 전문의 진단이나 수술(리퍼럴) 등 치료 여부를 결정한다고 알고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서 “100% 메디컬 그룹이 결정한다”고 말했다.

메디컬 그룹이 크면 자연히 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 그룹의 재정 문제를 고심해 환자들의 전문의 진료나 수술 승인에 인색 할 필요가 없다. 소규모 의료그룹과는 달리 환자들의 예방 진료와 치료에 더 적극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진다.

서울 메디컬 그룹은 올해에도 미국 대형 메디케어 보험회사인 ‘웰케어’로부터 최고 등급인 ‘5스타’ (5 Star)를 받았다. 벌써 4년째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5스타’가 환자에게 주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의료 및 환자 서비스 모든 면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이다. 캘리포니아내 100여개가 넘는 메디컬 그룹에서 ‘웰케어’의 5스타를 받은 곳은 서울 메디컬 그룹이 유일하다. 환자수가 10만명이 넘는 대형 메디컬 그룹도 5스타를 받지 못했다.

차민영 회장은 서울 메디컬 그룹의 성장 비결을 빠른 ‘리퍼럴’ (전문의 진료 및 치료 승인)과 매니지먼트 회사의 직영 체제를 꼽았다.

미국 메디컬 그룹은 대부분 리퍼럴을 2주 이내에 해준다. 하지만 서울 메디컬 그룹은 그 다음날 전문의 진료나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어차피 받을 검사나 치료를 2주동안 미룰 이유가 없다는 차민영 회장의 그룹 운영 방침 때문이다.

또 자체 의료 매니지먼트 회사를 갖고 있는 것도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장점중의 하나다. 그룹 운영을 직접 함으로써 경비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절감된 경비를 다시 환자 진료에 쏟아 부을 수 있다

메디케어는 메디컬 그룹 선택이 중요
전국 10개 도시 한인 최대 메디컬 그룹
웰케어 보험의 4년 연속 ‘5스타’ 수여



서울 메디컬 그룹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의료 그룹 (28년전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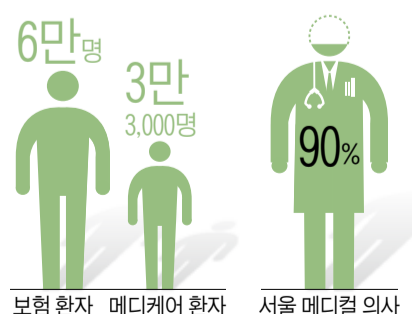
최고 등급 ‘5스타’ 4년째 수상

LA·OC, 샌호세 이외 전국 7개 지역



가주는 서울 메디컬 그룹 약자로 SMG를 사용 시애틀(Seattle Medical Group) 이외는 모두 시니어 메디컬 그룹의 약자로 SMG로 불린다.

LA·OC 지역 환자수 한인사회 의사 비율



고 차민영 회장은 의미를 부여했다. - 서울 메디컬 그룹이 28년만에 한인 사회 독보적인 메디컬 그룹으로 성장했다.

차: 우리 메디컬 그룹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100% 리퍼럴을 승인해 준다. 다만 성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 메디컬 그룹은 2주 안에 해주면 된다는 식이고 또 아예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 한인들은 너무 불편 해한다.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됐다.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당장 하루라도 빨리 해주야 환자들도 안심하고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날 해 주고 있다.

- 리퍼럴 허가는 보험회사가 해주는 것이 아닌가

차: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리퍼럴을 보험회사가 해준다 착각한다. 보험회사는 권한이 1%도 없다. 서울 메디컬 그룹에서 해주는 거다. 다른 데서 안해주다면 그 메디컬 그룹이 안해주는 것이다. 그걸 환자들이 모른다. 아무리 말해도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

- 리퍼럴을 많이 해주면 그룹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나

차: 맞는 말이다. 보험회사가 그룹에다가 모든 권한과 의무를 다 떠 넘겼다. 위임을 한 것이다. 결국 이익이 발생하면 메디컬 그룹이 갖고 반대로 손해가 나면 그룹에서 물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 회사는 한달에 일정 금액만 준다. 그것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당연히 리퍼럴을 많이 해주면 메디컬 그룹 유지가 어렵다. 실제 망한데도 많다. 그래서 많은 그룹들이 그

룹을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안해주고 싶어 한다.

- 그런데 리퍼럴을 100% 해주는 이유는

차: 우리는 환자를 위해 마이너스 나도 해줬다. 지금은 그룹이 커져서 마이너스는 안 나지만 예전에는 마이너스 날 때도 많았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에서 최고라고 자신한다. 리퍼럴이나 환자 치료나 모든 분야에서 다 그렇다. 다만 메디케어 보험 회사에서 추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안경, 보청기, 침술 등은 메디컬 그룹이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회사에서 모두 혜택 여부를 결정한다.

- 환자 치료에도 적극적이라고 한다.

차: 일부에서는 리퍼럴 저렇게 잘해 주면 그룹이 건널 수 있겠느냐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그런 걱정할 만큼 작은 그룹이 더 이상 아니다. 매니지먼트 회사를 인수해 의료비 지불 등 직영 체제로 운영해 불필요한 경비 지출도 줄였다. 이렇게 절약된 비용을 환자 치료에 더 쏟아 붓고 있다. 김정섭 기자

PPP 대출금, 탕감 받아도 세금 내지 않는다

**실업 수당은 연방 소득세 대상, FICA 는 안내
529로 낸 학비 돌려받았다며 60일 내에 입금해야**

연방정부는 팬더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를 비롯해 많은 주민들에게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정부 지원금이 과세 대상인지 궁금하다. 세금 전문 가이드 북 '택스 가이드 2021' 에서 밝힌 정부 지원금 세금 규정에 대해 알아봤다.

PPP론

연방정부는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직원 봉급을 일정 부분 보상해주는 '임금 보호 프로그램' 즉 PPP(Payroll Protection Program)을 통해 현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이 돈이 직원들의 임금 지급에 사용됐다면 탕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대출금을 받은 지 24주 이내에 종업원 신규 고용 또는 현재의 종업원 임금으로 최소 60%를 사용해야 한다.

◇대출금 탕감 면세

일반적으로 빌린 대출금을 탕감받으면 비즈니스의 수입으로 계산돼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출금은 예외다. 탕감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대출금의 최소 60% 이상을 정부 규정대로

임금으로 지불했다면 대출금은 전부 탕감된다. 하지만 임금으로 60% 미만을 사용했다면 부분적으로만 탕감 받는다.

◇공제(deduction) 안됨

PPP 대출금으로 사용한 비즈니스 경비는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다. 특히 대출금으로 임금을 지불했어도 공제받을 수 없다. PPP 규정에 따르면 대출금은 렌트비, 모기지 이자, 장비, 유틸리티, 공사 계약 같은 대다수 비즈니스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이런 경비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번 PPP 대출금으로 지불했다면 공제받지 못한다. 특히 세금을 대출금으로 낼 수도 없다. 다만 쓰다가 남은 돈을 되돌려줬다면 그 금액만큼은 공제받을 수 있다.

◇페이롤 택스

팬더믹 지원을 위해 긴급 편성된 '케어법' (CARE ACT)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용주가 내야 하는 종업원 페이롤 택스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절반은 2021년 연말까지, 나머지

절반은 2022년까지 내면 된다. 또 고용주가 PPP를 받아 종업원 임금으로 지불했어도 페이롤 택스를 연기할 수 있다.

◇병가(sick leave)

팬더믹 기간에 업주는 코비드-19의 영향을 받는 가족원을 돌보는 직원에게 2주간 유급 병가를 줘야 하며 10주 동안은 급여의 2/3를 지급해야 한다. 학교를 갈 수 없는 자녀들을 돌보는 직원에게도 해당된다. 업주는 유급 병가로 지불한 임금 모두를 택스 크레딧으로 되돌려 받는다. 하지만 업주가 PPP 대출금으로 직원의 유급 병가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 임금으로 택스 크레딧을 받지 못한다. 또 병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PPP 대출금 탕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회는 현재 PPP 대출금에 대한 세금 규정을 계속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떤 기준이 마련될지 더 지켜봐야 한다.

교육 적금 '529 플랜' 환불금

529 플랜은 자녀 또는 후손을 위한 교육 적금이다. 가입자들은 적립된 돈으로 자녀들의 대학 학비를 조달하게 된다. 하지만 코비드-19로 인해 대학들이 문을 닫겨

나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일부 대학은 등록금과 기숙사 및 기타 학비를 되돌려줬다.

만약 '529 플랜' 에서 돈을 인출해 학비를 냈다가 돌려받았다면 돌려받은 돈은 다시 '529 플랜' 계좌로 입금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적격 배분금' 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야 하고 10%의 패널티를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꺼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다음 학기 학비로 사용할 수 없다. 돌려받은 학비는 60일 이내에 529 계좌로 반드시 재입금돼야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

참고로 매년 1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529에서 돈을 꺼내 자녀들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학비로 사용할 수 있다.

홈오피스 공제

팬더믹으로 많은 사람이 집에서 근무한다. 이럴 경우 집에 차려 놓은 오피스 비용은 '스케줄 A' 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2017 감세 및 일자리법' 에 따라 직원은 비즈니스 경비를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직장에 고용돼 있다면 홈오피스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고용주 없이 독립적으로 일을 한다면 '스케줄 C' 를 이용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실업 수당

코비드-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실업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실업수당도 수입에 포함돼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연방 정부에서 주는 실업 보조금(지난해 600달러)도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택스로 불리는 FICA 세금은 내지 않는다. 실업수당의 세금은 10%를 넘지 않지만, 기타 수입이 있다면 과세 세율이 높아져 더 높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실업 수당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주도 있다. 앨라배마, 캘리포니아, 몬태나,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는 실업수당에 과세하지 않는다. 특히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와이오밍 등 7개 주는 아예 주 소득세가 없다.

테네시와 뉴햄프셔는 투자 수입에만 소득세를 물리며 인디애나와 위스콘신은 실업수당의 일부만 과세한다. 그런데 실업수당에 과세하는 일부 도시와 카운티도 있으므로 거주 도시나 카운티의 규정을 알아두는 것도 좋다.



일러스트: 유재일

노후 챙겨주는 자녀에게 은퇴 자금 물려주기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었던 영희 씨는 올해 74세로 그동안 '세금 유예 은퇴 플랜'에 많은 돈을 적립해 놓았다.

영희 씨 자신의 은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돌봐 줄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저축했다. 자녀들이 물려받은 재산으로 인해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원치 않는다. 그래서 13년 전부터 '세금 유예 은퇴 저축 플랜'에서 매년 돈을 꺼내,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지 않는 '로스 IRA'로 옮겨 놓기 시작했다. 지금은 영희 씨가 모아둔 돈의 2/3가 로스 IRA 계좌로 이체돼 있다. 영희 씨가 죽은 후, 적립금이 자녀에게 가게 되면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을 찾아 쓸 수 있게 된다.

은퇴 후 소득세를 줄이기

영희 씨가 세금 유예 플랜에서 돈을 찾아 로스 IRA로 옮겨 놓는 것을 '로스 IRA로의 전환' (Roth IRA Conversion)이라고 부른다. 은퇴 플랜에 넣어둔 돈을 꺼내 '로스 IRA'로 옮겨 놓는 주된 이유는 세금 때문이다.

은퇴 후 수입이 많아지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등급이 높아진다. 그러면 정부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에 대한 과세율도 높아지고 고소득자들은 메디케어 '파트 B'와 메디케어 '파트 D'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따라서 찾아 쓸 때 과세 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내야 하는 은퇴 플랜을 은퇴 초기 수입이 줄어들어 과세율이 낮아졌을 때 일찌감치 세금 없는 은퇴 플랜으로 바꿔 놓고 이를 물려받는 자손들에게도 면세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사전 수입 vs 세후 수입

은퇴 플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세금을 내지 않은 근로소득에서 적립하는 플랜과 세금을 낸 순수입에서 적립하는 플랜이다.

사전 수입 적립 플랜은 나중에 찾아 쓸 때 밀렸던 세금을 내야 하므로 '세금 유예 은퇴 플랜'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많이 가입하는 '전통 IRA' (traditional IRA)나 직장 은퇴 플랜인 401(k)가 이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세후 수입 적립 플랜은 이미 세금을 낸 후의 수입으로 돈을 적립했기 때문에 은퇴 후 찾아 쓸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플랜을 제안했던 연방 의원의 이름을 따 '로스' (ROTH) 플랜이라고 부른다. '로스 IRA'나 '로스 401(k)'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만일 전통 IRA 또는 401(k) 등 세금 유예 은퇴 플랜을 가지고 있다면 만 72



일러스트: 유재일

'로스 IRA전환' (Roth IRA conversion) 관심 높아져 최소배분금 규정 없고 자손들은 세금 안내

세가 되는 해부터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돈을 의무적으로 찾아야 한다. 이를 '최소 배분금'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부른다. 만일 찾아야 할 최소 배분금을 찾지 않으면 금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연기해줬던 세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통 IRA나 401(k)에서 돈을 찾아 쓰지 않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일단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 수입으로 잡혀 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이외 다른 수입이 있다면 그것들과 합쳐져 과세 소득이 높아지므로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반대로 세금을 낸 후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IRA'는 RMD 규정도 없어 죽을 때까지 찾지 않아도 되며 또 찾아 쓴다고 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유산 은퇴 플랜 규정 강화

월스트리트 저널은 팬더믹으로 시장이 불안했던 지난해 전통 플랜을 '로스'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주식시장이 가라앉자 자산이 떨어져 로스로 전환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방 의회가 유산으로 물려준 세금 유예 적립 플랜(inherited traditional IRA)에 대해, 배우자가 아니면 10년 이내에 모두 찾아 써야 하

도록 법을 강화하면서 많은 사람이 세금도 내지 않고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로스'로의 전환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다.

영희 씨의 경우, 세금 유예 플랜에 들어 있는 자금의 80%는 안전한 채권 펀드에 옮겨 놓았지만 '로스'로 전환해 놓은 돈의 80%는 주식형 뮤추얼 펀드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다.

영희 씨의 투자를 조언해준 알리시아 서 어드바이저는 "이 돈은 영희 씨가 죽을 때까지 쓰지 않을 돈"이라고 말했다.

사전 자금을 세후 자금으로

로스 전환은 간단하다. '사전' 자금을 '세후' 자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은퇴 자금을 관리하는 회사에, 예를 들어 세금 유예 플랜에 있는 5만 달러 어치의 S&P 500 인덱스 펀드를 '로스' 계좌로 옮겨 달라고 주문하면 된다. 그리고 다음 해 세금 보고 때 전환한 5만 달러는 일반 소득으로 계산돼 상응하는 소득세를 내면 된다.

노스캐롤라이나 트리어드 파이낸셜의 패트릭 러시(44)는 지난해 초 팬더믹 우려로 주식 시장의 가치가 1/3 하락하자 상당수 고객이 전통 IRA 등 세금 유예 플랜을 로스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러시 대표 자신도 주식형 뮤추얼 펀드 20만 달러를 로스로 전환하면서 과세율이 37%로 높아졌다. 연방 및 주 소득세 8만5,000달러를 내게 됐지만, 지금은 시장이 회복돼 전환해 놓은 펀드가 무려 40만 달러로 뛰어올랐다. 러시 대표가 이 돈을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세금유예 플랜에 넣어 뒀었다면 미래에 찾아 쓸 때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특히 전환한 로스 계좌를 자손에게 물려줘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과세 비율 주의해야

마켓 상황과 관계없이 로스 전환은 특정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예를 들어, 수입이 낮았던 은퇴자들이 72세부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최소 배분금' RMD를 받게 되면 수입이 올라가 소셜 연금과 세 비율이 높아지고 전체적인 과세 비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전통 IRA 등 세금 유예 은퇴 플랜에 대한 조기 인출 벌금이 적용되지 않는 59.5세 이후부터 로스로 전환하면 된다. 물론 기타 수입이 많다면 세율이 높아져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계산을 잘해야 한다. 특히 소셜 연금을 받을 때, 로스로 전환하는 자금이 많으면 금액에 따라 소셜 연금의 50% 또는 85%가 과세 대상이 된다.

영희 씨가 세금 유예 은퇴 플랜을 세금을 내서까지 로스로 전환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자신의 노후를 돌봐 줄 자녀에게 세금 없이 보상을 해주고 싶어서다.

존김기자

(최소 인출금)

은퇴 플랜 있다면 4월 1일 전까지 첫 RMD 받아라

전통 IRA·SIMPLE IRA·401(k) 등 72세부터 받아야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는 70.5세부터
‘로스’ 플랜은 세후 수입이므로 인출 규정 없어

세금을 내지 않고 모아두는 은퇴 연금 플랜의 적립금을 하나도 찾지 않고 대대로 물려줄 수 있을까. 대답은 ‘없다’이다.

일정 나이가 되면 돈을 찾고 싶지 않아도 연방 정부에서 정한 만큼의 금액을 반드시 찾아 써야만 한다. 찾지 않으면 절반은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를 ‘최소 인출금’(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하 RMD)이라고 부른다. RMD는 IRA, 심플 IRA(SIMPLE IRA), SEP IRA 또는 직장 은퇴 플랜 등등, 세금을 내지 않은 돈으로 적립하는 은퇴 플랜에만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에서 연기해 줬던 세금을 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 세금을 낸 후의 순수입, 즉 세후 수입에서 적립하는 ‘로스’(ROTH) 플랜은 RMD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RMD 찾기

예전에는 플랜 소유주의 나이가 70.5세되는 해부터 RMD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법이 바뀌어 72세로 늦춰졌다. 2019년 연말 ‘추가 통합 세출법’에 포함된 ‘은퇴 연금 안정법’(SECURE ACT)에 따라 의무 인출 나이가 72세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 70세 생일을 맞는 사람은 72세부터 RMD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전에 70세 생일을 맞은 사람은 예전처럼 70.5세부터

RMD가 적용돼 돈을 받는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94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물론 소유주 나이가 59.5세를 넘으면 조기 인출에 따른 10% 페널티 없이 은퇴 계좌에서 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찾아 쓸 수 있다. 다만 찾는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도 돈을 찾지 않고 미루려 한다. 연방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72세부터는 최소한의 돈을 찾아 써야 한다는 RMD 규정을 두는 것이다.

그런데 의무 인출 나이가 지났는데도 해당 연도에 돈을 찾지 않으면 찾아야 하는 금액, 즉 RMD의 50%는 세금(벌금)으로 내야 한다.

RMD가 적용되는 연금 플랜은

전통 IRA(traditional IRA), SEP IRAs, SIMPLE IRAs, 직장 401(k) 플랜, 교사 및 비영리 403(b) 플랜, 비영리 457(B) 플랜, 종업원 이익 배분 플랜, 기타 확정 각출형 은퇴플랜(defined contribution plans)에 적용된다. 모두 세전 적립 은퇴 플랜들이다. 하지만 직장 은퇴 플랜인 401(k), 교사 및 비영리 403(b), 이익공유 비영리 457(B), 종업원 이익 배분 플랜, 기타 확정 각출형

RMD는 언제 받아야 하나

(72세가 된 다음 해 4월 1일까지)

표준 연금 지급 기간표(Uniform Lifetime Table)

- 미혼 연금 보유자
- 부부간의 나이차이가 10년 이상 나지 않은 부부
- 부부지만 배우자만 은퇴 플랜 수혜자가 아닌 경우

테이블 I(싱글 기대 수명표)

- 수혜자가 IRA 소유주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

테이블 II(조인트 라이프 및 생존 배우자 기대수명표)

- 배우자의 나이차가 10년 이상 나고 IRA의 단독 수혜자인 경우

RMD가 적용되는 연금 플랜

전통 IRA(traditional IRA)·SEP IRAs·SIMPLE IRAs·직장 401(k) 플랜·교사 및 비영리 403(b) 플랜·비영리 457(B) 플랜·종업원 이익 배분 플랜·기타 확정 각출형 은퇴플랜(defined contribution plans)

은퇴플랜의 경우는 RMD 인출 나이가 지났다고 해도 직장에서 허락한다면 은퇴 전까지 RMD를 찾지 않아도 된다. 아직 직장에 다닌다면 직장 인사과에 RMD 적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RMD는 언제 받아야 하나

RMD 적용 연령이 시작되는 첫해에는 이

듬해 4월 1일까지 찾아야 한다. 72세가 된 다음 해 4월 1일까지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매년 연말까지 받아야 한다.

금액은 IRS의 ‘표준 연금 지급 기간표’(Uniform Lifetime Table)에 의해 결정된다. 전년도 연말 은퇴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잔고를 이 표준 연금 지급 기간표로 나누면 된다. 연령별 기대 수명치로 나눈다고 보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잔고는 줄고 기대수명치는 떨어지게 되므로 매년 일정 금액의 돈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기간 표는 모든 은퇴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결혼 상태 등에 따라 다른 기간 표가 적용될 수 있다.

△표준 연금 지급 기간표(Uniform Lifetime Table) -미혼 연금 보유자, 부부간의 나이차이가 10년 이상 나지 않은 부부, 부부지만 배우자만 은퇴 플랜의 수혜자가 아닌 경우 △테이블 I(싱글 기대 수명표) -수혜자가 IRA 소유주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 △테이블 II(조인트 라이프 및 생존 배우자 기대수명표) -배우자의 나이차가 10년 이상 나고 IRA의 단독 수혜자인 경우 적용된다. 어떤 기간표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찾는 금액도 달라질 것이다.

2020년 3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진작 지원법인 ‘CARE Act’에 서명하면서 2020년 RMD 의무 규정을 잠정 보류시켰다. 하지만 2021년까지 연장시키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재 72세 이상이라면 연말까지 RMD를 찾아야 한다. **20면에 계속**



부부 수입 32,000 넘으면 소셜 연금 50% 이상 과세

소셜연금 세금 계산 어떻게 하나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에도 세금은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연금의 일부는 과세 대상이다. 소셜 연금은 평생 열심히 일해 번 돈에서 떼어내 정부에 내고 정부는 이를 돌려주는데 세금 내면 되겠냐고 항변하는 사람들도 많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정부에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미국인은 소셜 연금에서 소득세를 낸다는 사실이다.

소셜 연금은 정부에서 받는 소셜 연금의 절반과 기타 은퇴 수입을 합친 금액이 정부에서 정한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소셜 연금의 최고 85%가 과세 소득으로 잡힌다. 연금의 최고 85%까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과세 수입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퇴를 전후해 전략만 잘 짚다면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어 소셜 연금에서 세금을 제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다.

결론부터 정리한다면 ◇소셜 연금의 절반을 합친 총수입이 최소 개인 2만5,000달러, 부부 3만2,000달러 이상이면 소셜 연금의 최고 50%까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과세 소득이 된다. ◇소셜 연금의 절반을 포함한 총 수입이 개인 최소 3만4,000달러 이상, 부부 4만4,000달러 이상이면 연금의 최고 85%까지 과세 소득이 된다.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 이외 별다른 은퇴 후 수입이 없다면 연금에 과세되는 세금은 없고 아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로스’ IRA 등 세금을 낸 후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은퇴 플랜은 은퇴 후 절세에 도움이 된다.

소셜 연금에서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나

1983년 이후 일정 은퇴 수입이 IRS가 정한 수입 한계를 넘으면 일정 부분 세금을 내도록 했다. 그런데 이후 수입한계는 인플레이션 요율이 적용되지 않아 동일하다. 수입은 높아지는 데 한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셜 연금 이외에도 기타 수입이 있는 미국인들은 대부분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면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까. 앞서 말한 대로 소셜 연금과 기타 수입을 합친 ‘조정 후 총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은퇴 후 받는 급여가 될 수도 있고 자영업자의 수입, 이자, 배당금, 은퇴 연금



영희 부부의 2020년 소셜 연금 총합계는 2만6,000였고 기타 수입은 3만 달러였다. 과세 소득 계산법의 합친 수입은 소셜 연금의 절반인 1만3,000달러와 기타 수입 3만 달러이므로 총 4만3,000달러가 된다. 이 금액은 부부 3만2,000~4만4,000 범위에 해당하므로 영희 부부의 소셜 연금 과세 수입은 50%인 1만3,000달러다.

세금을 낼 때는 영희 씨 부부의 수입 3만 달러에 소셜 연금 절반인 1만3,000달러를 합친 금액에 표준 또는 항목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실제 과세 소득이 된다.

배우자 연금, 사별 연금, 장애 연금, SSI도 과세 대상인가.

◇배우자 연금은 기타 연금 수혜자와 동일하게 계산해 과세 기준이 정해진다.

이혼한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다. 합친 수입이 개인 2만5,000달러 이상이면 연금의 최고 50%, 3만4,000달러 이상이면 최고 85%까지 과세 소득이 된다.

◇사별 배우자 연금(Survivor Benefits) 중에서 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별 세금이 없다고 보면 된다.

어린 자녀들에게 과세 기준을 넘을 만한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어린 자녀들을 대신해 이런 연금을 받는 부모나 보호자는 연금을 수입으로 계산해 보고할 필요는 없다.

장애 연금

장애 연금은 소셜 시큐리티 은퇴 프로그램에서 명시한 과세 규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 2만5,000달러 커플 3만2,000달러 이상이라면 연금이 과세 대상이다.

SSI

SSI는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 아니다. 고령, 장애, 시각장애자 등 극빈자에게 제공되는 ‘생활비 보조 수입’(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이다. 따라서 세금을 떼지 않는다.

소셜연금도 주 정부 세금 대상인가

소셜 연금에 세금을 징수하는 주가 13곳이다. 콜로라도, 코네티컷, 캔자스,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노스 다코타, 로드 아일랜드, 유타, 버몬트, 웨스트 버지니아 등이다. 과세 기준은 모두 다르므로 주 세금 관련 부서에 알아봐야 한다.

수입+면세 대상 이자+소셜 연금 절반 합쳐

일정 수입 한계 넘으면 연금의 최고 85%까지 과세

으로부터 받는 ‘최소 배분금’(required minimum distribution·RMD), 기타 과세 소득 등을 모두 합친다. 여기에 면세 이자까지 합친다. 이 부분은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계산에는 포함된다.

만약 총합계가 수입 한계를 넘게 되면 소셜 연금의 최소 절반은 과세 소득이 된다. 여기에서 최종 순이익을 계산하려면 표준 또는 항목별 공제를 제해야 한다. 제하고 남은 수입은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 기준이 결정될 것이다.

◇요약해 보자.

합친 수입=조정 후 총수입+비과세 이자+소셜 연금의 절반이다. 개인 세금 보고자라면 합친 수입이 2만5,000~3만4,000달러면 소셜 연금의 50%가 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내야 한다. 3만4,000달러를 넘으면 85%가 소득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혼자 사는 철수는 2020년 소셜 연금이 2만 달러였고 기타 은퇴 후 수입으로 2만 달러를 받았다. 과세 소득을 계산하려면 기타 수입 2만 달러에 소셜 연금 2만 달러의 절반인 1만 달러를 합친다. 합친 수입이 3만 달러로 2만5,000달러는 넘지만 3만4,000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철수의 소셜 연금 중 50%인 1만 달러는 과세 수입으로 잡힌다. 결혼한 영희가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한다. 합친 수입이 3만2,000~4만4,000달러이면 소셜 연금의 50%까지 과세 소득이 될 것이고 4만4,000 이상이면 소셜 연금의 85%를 과세 소득으로 내야 한다.

그래픽: 유재일

화이자는 21일, 모더나는 28일 간격 두차례 접종

코로나 백신관련 일문 일답

많은 사람들이 사전 예약을 한다. 그래야 시간도 절약하고 다른 대기자와의 접촉도 최소화할 수 있다. 동의서를 작성한 후 백신을 맞게 되는데 알러지 병력에 따라 접종 후 최소 15~30분은 현장에서 기다리며 부작용 여부를 확인한다.

예약을 하고 갔다면 전체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접종 장소에 갈 때 가져가야 할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 신분증과 예약 증명만 필요하다. 일부 접종 장소는 접종 자격이 있는지 확인 하기 위해 배지 같은 추가 서류 또는 신분증을 요구할 수도 있다. 백신 비용은 내라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만약 돈을 요구한다면 이유를 묻는다. 사기일 것이다.

-화이자·바이오엔텍과 모더나 백신의 차이를 걱정해야 하나

미국에서 사용되는 두 백신 모두 안전성과 효과가 비슷하다. 뉴욕 컬럼비아대학의 외과 엘-사드르 전염병학 교수는 두가지 백신의 차이는 두번째 접종 일정이 다르다는 점이라면서 화이자는 21일 간격으로 모더나는 28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백신을 맞기 전 금식하거나 음식 또는 음료수 섭취를 피해야 하나

음식을 조심할 필요는 없다. 피를 뽑거나 다른 백신을 맞을 때 다소간의 어지러운 증상을 느끼는 사람들은 접종 전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시카고 쿡카운티 병원의 그레고리 현 백신 코디네이터는 조언했다.

-백신을 맞기 전에 해열제를 복용해야 하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해도,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백신 접종 전에 이부프로펜이나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해열제 복용을 권하지 않는다. 다만 접종 후에 열 또는 접종 부위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해열제를 복용할 수는 있다고 CDC는 밝혔다.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동안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은 있나

공공 장소 어디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은 높다. 백신 접종 당일 별도의 개인적 방역 조치는 필요치 않지만 백신 접종 장소를 통제하는 주최측은 사전 예방을 위해 바닥 및 가구 소독, 최소 6피

트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접종 후에는 어떻게 하나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접종 장소에서 잠시 머물며,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알러지 반응 등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백신 접종 후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대기하고 있는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이 응급 조치를 취한다. 현기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모두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 보다는 백신 접종에 따른 지나친 긴장으로 인해 오는 일시적 현상이다.

백신을 맞은 후 15~30분 정도 대기하고 있다가 아무런 알러지 반응이 관찰되지 않으면 귀가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접종 후 수시간이 지난 후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즉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백신접종 기록을 받나

성인은 백신 접종 번호와 백신 종류, 2차 백신 접종일 등을 포함한 백신 카드를 받게 된다. 2차 접종을 받을 때는 이 카드를 가져가야 한다. 접종 날짜와 종류 등은 전산으로 기록되며 직장이나 여행 때 접종 확인 서류로 사용된다.

-백신은 두번 맞은 이유는

두번째 백신은 면역의 지속력을 높여준다. 반드시 스케줄에 따라 2차 접종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접종 후 얼마나 지나야 면역 효과가 나타나나

어떤 종류의 백신이라도 몸에서 면역을 만들어 내는데 시간이 걸린다. 특히 두번 맞아야 하는 백신은 두번째 접종 후 1주 또는 2주 후에 면역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극소수지만 8주 이후에 생성되는 경우도 있다.

-부작용은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나

반복된 실험을 통해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나왔지만 완성한 면역 시스템을 가진 일부 젊은이들은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

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로감, 근육통, 접종 부위의 통증 등의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

엘-사드르 박사는 “많은 연구에서 55세 이상 연령대는 면역 반응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의 면역 체계는 젊은이들의 것보다 덜 왕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코로나에 걸렸던 사람들 역시 강한 면역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향후 지속 기간은 확실치 않아 다른 백신은 14일 지난 후에 무료 접종, 세금으로 충당 CDC, 임신부도 맞아야 권고

-백신을 맞은 후에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나

물론이다. 백신이 100% 예방해 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좋은 면역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특히 현재로서는 면역 효과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른다. 현재 백신 접종은 일종의 실험이라고 보면 된다.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감염되는지의 여부도 주의해서 관찰하는 단계다. 백신을 맞으면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증상이 없는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계속 전염시키는지 등등. 현재까지 백신은 바이러스 전파를 막아주는 것으로 돼 있지만 좀더 지켜봐야 한다.

-백신을 맞은 후 가족들을 만나도 되나
만나도 된다. 하지만 매우 주의해야 한다. 당장 만나기 보다는 가족 모두 백신 접종

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이 주의에 있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만나라.

-자유롭게 여행해도 되나

전문가들은 여행해도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위험이 적다는 것 정도 이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집단 면적이 생기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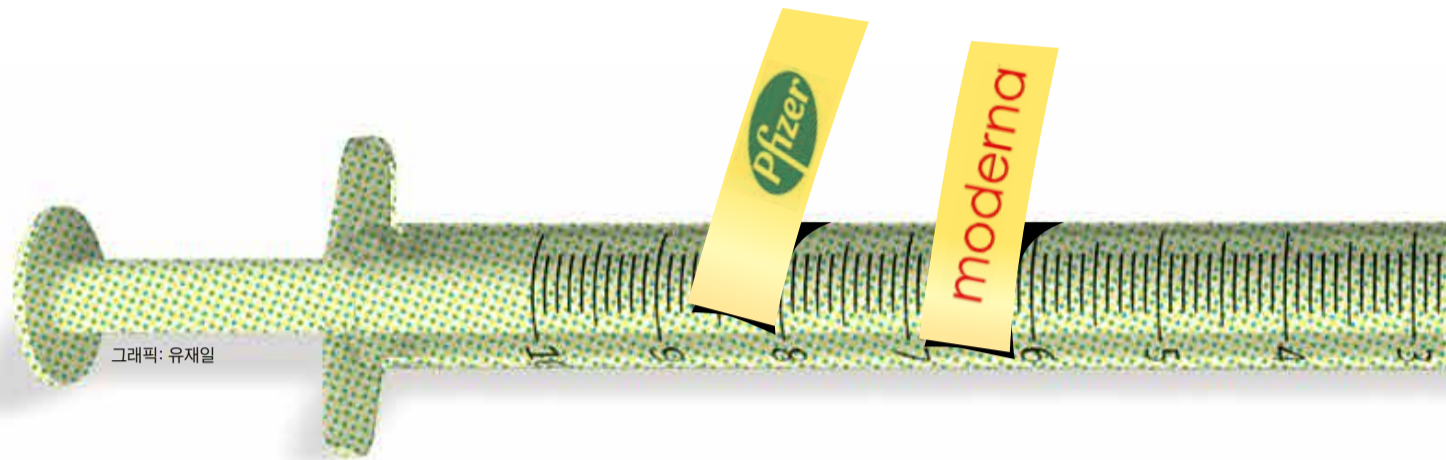
전문가들도 아직 모른다. 집단 면역이란 백신을 맞았거나 이미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감염이 확산되지 않는 단계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간 감염이 어려워지고 신생아 같이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해야 집단 면적이 가능한지는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의 집단 면적은 확인된 바 없다.

-백신 효과는 얼마나 갈까

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뒤 얼마나 오래 ‘자연 면역’이 유지되는지는 질병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는 신종이기 때문에 자연 면적이 얼마나 갈지 모른다. 하지만 첫 감염 이후 90일 동안은 재 감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므로 아직 확인할 수 없다. 백신 접종이 계속되므로 조만간 면역의 지속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백신 값은 누가 지불하나

백신은 미국민의 세금으로 구입해 미국인들에게 접종하므로 무료다. 백신 접종을 해주는 시설에서 행정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각자의 보험회사에서 지불하며 무 보험자는 정부 구호기금으로 충당된다. 백신 행정 비용을 지불하지 못한다고 해서 백신 접종이 거부되는 일은 없다. 돈도 요구할 수 없다. ↗



그래픽: 유재일

코비드 백신 부작용 대부분 수일내 사라져



▶ -접종전까지 해야 할 일은 철저한 개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 마스크를 쓰고 코와 입을 가린다. 6피트 거리를 유지한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을 피한다. 환기가 잘 안되는 곳을 피한다. 손을 자주 씻는다.

-감염된 적이 있어도 백신 맞아야 하나 맞아야 한다. 재감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비드-19 증상으로 '모노클론 항체' 나 혈장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90일 지난후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런 치료를 받았는지 확실치 않다면 주치의에 문의한다.

-백신은 꼭 맞아야 하나 연방정부는 강제로 접종을 명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필수 의료진, 정부 공무원 등은 주 또는 지방정부 훈령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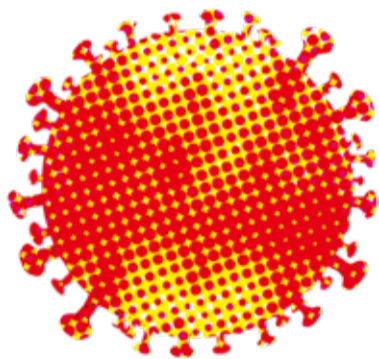
-임신부인데 백신 맞아도 되나 임신부의 접종도 추천한다. 하지만 접종 전 주치의와 상의할 것을 조언한다. 모유 수유 중인데 안전 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백신이 수유여성에 안전한지, 모유를 먹는 신생아에게 mRNA 백신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아직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백신 접종을 추천하며 역시 주치와 상의한다.

임신부는 CDC가 임신부의 접종을 모니터링하는 v-세이프에 등록할 것을 추천한다. 어떤 임신부가 접종 후 문제가 있다면 CDC가 즉시 임신부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다른 질병 백신을 맞으려 하는데 감기, 대상 포진 같은 백신을 맞으려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후 14일은 기다려라. 중복 백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수집되지 않았다. 14일 이내에 다른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코로나 백신을 처음부터 다시 맞을 필요는 없다. 자넷김기자

코비드 백신 부작용 일문일답

**위험 사례 보고된 것 거의 없어
부작용은 고열·구토 등 7 사례
접종 전 해열제 자제해야**



코비드-19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1차 접종 이후 2차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이 1/3에 달한다는 보고도 나왔다. 대부분의 부작용 증상은 48시간 이내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지만 알러지를 가진 접종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연방 질병 통제예방센터(CDC)는 웹사이트를 통해 지금까지 보고된 7가지 부작용과 함께 코비드 백신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설명했다.

미국 내 모든 주들이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일부 주는 16세 이상 모든 연령대의 기존 병력자들도 조만간 1차 접종과 함께 한달 이내에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월 16일 모든 미국인들에게 오는 6월 말까지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고 안소니 파우치 미국 앨러지 감염병 연구소장은 4월부터 일반인에 대한 접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한, 화이자 또는 모더나 mRNA 계열의 백신중 하나를 접종하게 된다. 이들 백신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각각 95%, 94.1% 이상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백신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 조만간 다른 종류의 백신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현재 마지막 임상 실험 단계에 있는 백신이 20여종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또 존슨 & 존슨 백신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백신이 개발돼 전 세계에 공급되고 있다. 존슨 & 존슨 백신은 냉동 또는 특수 저장 장치가 필요 없지만 예방 효과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존슨 & 존슨 백신 접종을 최종승인했다.

현재 백신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부터 우선순위로 접종되고 있다.

또 많은 주는 12월부터 65세 이상자에게도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면 일간 USA는 미국 내 인구 15%가 최소 1차 이상의 접종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접종자가 늘어나면서 의료계는 부작용에 대한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며 새로운 증상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번 백신은 충분한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용 사례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CDC는 이에 따라 부작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만들고 있으며 부작용 사례를 실시간 모니터 하는 'VAERS' (Vaccine 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를 개

설했다. CDC가 지금까지 집계한 모더나 및 화이자-바이오엔텍 부작용 사례는 △접종 부위 통증 △부어오름 △피로감 △두통 △오한 △고열 △극소수지만 관절통 호소다.

대부분의 사람은 한두 가지의 미미한 증상을 경험하지만 곧 사라진다. 드물게 이들 7가지 증상을 모두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 일상생활에 다소간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수일 내 사라지는 게 보통이라고 CDC는 밝히고 있다.

언제 부작용이 시작되나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두 번째 접종 때 경험한다. 50% 이상의 접종자들이 이틀 정도 접종 부위의 통증을 느낀다. 1차 접종 때만 이런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증상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알러지를 걱정해야 하나

지난해 12월 영국에서 첫 접종을 시작했을 때 백신을 맞고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1건 있었다. CDC는 현재 100만 접종 당 11건의 과민 반응 증상이 보고됐다면서 호흡 곤란, 부종, 발진 또는 저혈압 증상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항 알러지 치료제인 부신 호르몬 투입으로 즉시 완화된다. 알러지 반응에 대한 우려로 인해 보통 접종 후 15~30분 동안 접종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다. 16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접종은 아직 정확한 연구가 나오지 않아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 현재 정확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조만간 어린이용 백신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증상을 어떻게 완화시키나

대부분의 증상은 일시적이며 일상 생활에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접종 후 잘 쉬고, 잘 먹고, 과로를 피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통증과 불편함은 타이네롤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시중 해열제로 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접종 전 복용은 권장하지 않으며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접종 부위의 발진이 계속되는 등의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면 주치의에게 연락하고 CDC의 VAERS 시스템을 이용해 즉시 보고한다. 접종 24시간이 지난후 통증과 고열이 동반 된다면 주치의에 연락하고 증상이 수일 또는 수주 지속된다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

3-PLY DISPOSABLE MASKS

**착용감 좋고 얼굴 부위에 잘 달라붙는 마스크
최고의 재료, 인체에 맞는 맞춤형 마스크**



**뜨는 공간 없어
바이러스 유입
철저히 차단**

미국서 제작하는 미국 마스크



연방질병통제예방국(CDC)은 마스크 2개 사용을 강력히 권고

CDC는 실험실에서 6피트 거리로 마네킹 2개를 세워놓고 코로나바이러스 크기의 입자가 다른 마네킹에 얼마나 전파되는지를 실험했다. 실험 결과, 수술용 및 천 마스크 1개는 다른 마네킹에서 호흡으로 날아오는 입자를 40% 가까이만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수술용 마스크 위에 천 마스크를 덮어씌우면 80%의 입자를 막아 냈다. 양쪽 마네킹에 각각 두개의 마스크를 씌우면 입자의 95%를 막았다고 CDC의 존 브룩스 박사는 밝혔다. CDC는 이번 실험에서 어떤 마스크를 사용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분명한 것은 두개의 마스크는 마스크 한 개보다 훨씬 더 높은 방역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라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얼굴에 잘 달라붙는 마스크 중요

CDC는 2개의 마스크를 사용하는 방법도 업데이트 했다. CDC는 마스크를 2개 사용하면 얼굴 코 윗 부위와 마스크와의 작은 공간을 막아 줄 수 있어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얼굴에 마스크가 잘 접촉되는 마스크가 좋다

이미 2개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감염력이 높은 변종 바이러스를 막아내려면 마스크 2개는 기본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강력 권고했다.

1420 ESPERANZA STREET LOS ANGELES, CA 90023

(323)262.0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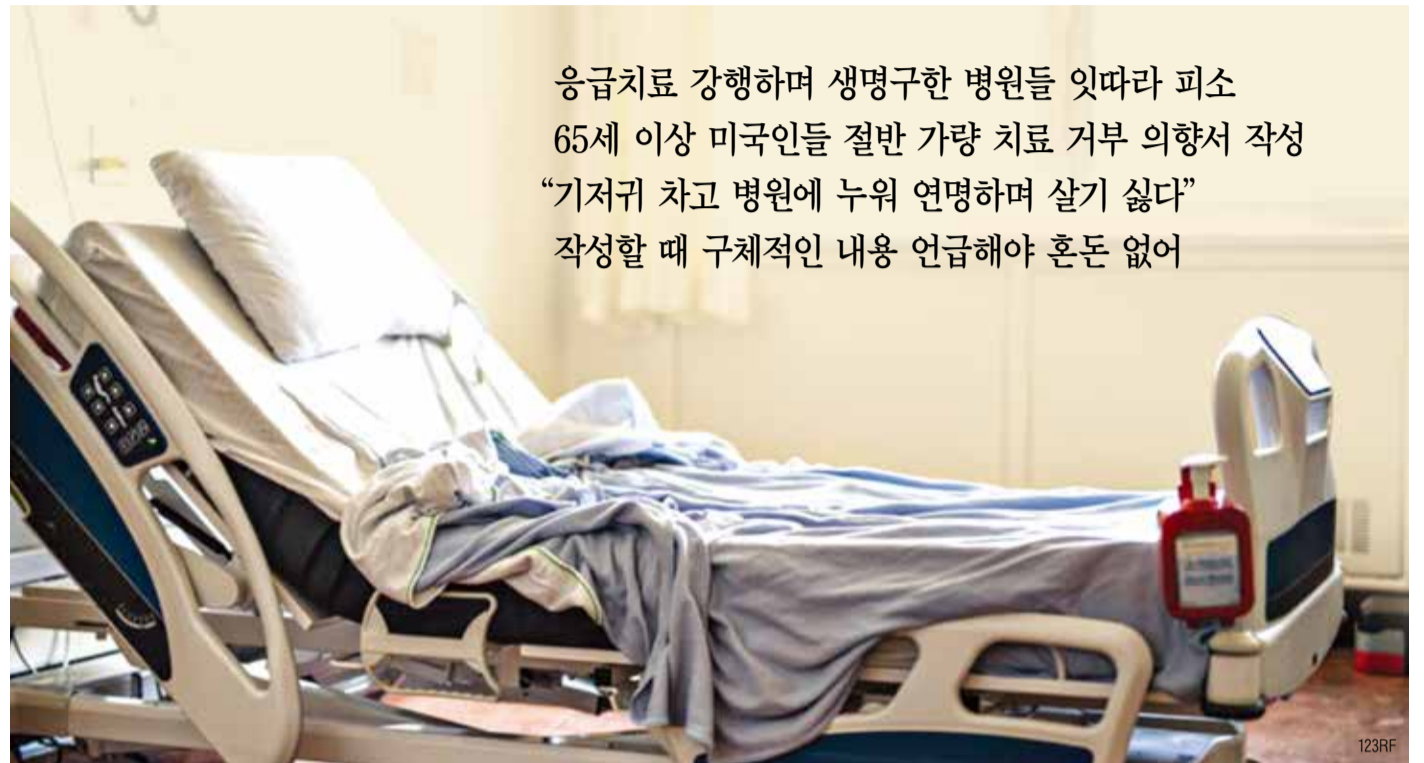
병원들, “살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십 수년전부터 응급 상황에서 심폐 소생이나 연명 치료를 하지 말아 달라는 의료 지침서를 작성해 두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기저귀나 인공 호흡기 등 인간의 마지막 존엄을 훼손하고 싶지 않다는 환자들의 유언과도 같은 지침서다. 하지만 이런 환자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원과 의사들이 연명치료를 했다가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예전에는 소송을 제기해도 대부분 병원이 승소했지만 수년전부터 환자의 존엄을 인정해 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럴드와 일레인 그린버그는 1976년 치대 학생시절 만나 결혼했다. 둘은 롱아일랜드와 맨해튼에서 개업하며 아들 둘을 키워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 2010년 어느 날 일레인은 평소 천재적 수학 능력을 뽐내던 남편 제럴드가 식당에서 팁을 계산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일레인은 “예전처럼 샤프 했던 제럴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신경과를 찾은 남편 제럴드는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일레인 그린버그는 “남편은 기저귀 차고 몸에 튜브를 꽂고 병원에 누워 있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린버그 부부는 고민 끝에 변호사를 불러 2011년 ‘사전 의료 의향서’(advance directives)를 작성했다.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만약 그가 위독하거나, 영구 의식불명, 또는 심각하고 회복 불능의 뇌손



응급치료 강행하며 생명구한 병원들 잇따라 피소
65세 이상 미국인들 절반 가량 치료 거부 의향서 작성
“기저귀 차고 병원에 누워 연명하며 살기 싫다”
작성할 때 구체적인 내용 언급해야 혼돈 없어

상을 입는다면 고통을 주지 않는 편안한 조치를 취하기 원했다. 심폐소생이나 인공 호흡도 원치 않았다. 튜브를 꽂아 영양을 공급하는 것도 원치 않았고 항생제 처방도 거부했다. 제럴드 그린은 2016년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뉴로셀 병원에서 사망했다. 그가 죽자 부인 일레인은 제럴드가 폐혈증으로 의식이 없고 거의 죽기 직전이었는데 병원과 담당 의사는 그가 작성해 놓은 ‘사전 의료 의향서’ 대로 하지 않았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레인은 소장에서 병원과 담당의는

뉴욕주의 ‘MOLST’(medical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폼과 부인의 명백한 요구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MOLST’ 폼이란 1-2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심각한 증상의 환자를 위한 의료 의향서로 생명 연장 치료를 받거나 이를 원치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는다.

원치 않은 치료로 환자 존엄 훼손?

병원 의료기록을 보면 제럴드는 항생제를 투여 받았고 원치 않은 기타 치료와 검사를 받았다.

소장에 따르면 제럴드가 원치 않았던 무반응 상태에서 한달이나 살아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몬티피오리 대학은 뉴로셀 병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네스타 세인트폴에 있는 미셸 햄라인 법대의 사디오스 폼 교수는 “과거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을 살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해쳤다고 하느냐’고 항변하곤 했는데 요즘 법정은 이런 것을 하나의 보상해야 할 손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22면에 계속**

소송 사례들

조지아에서는 재클린 알리시아가 어거스트 닥터스 병원으로부터 100만 달러 합의금을 받아 냈다. 알리시아의 91세 된 할머니에게 병원은 할머니의 건강관리 대리사와 사전 의료의향서에 따른 알리시아의 지침에도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알리시아는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알리시아는 결국 할머니의 생명 보조 장치를 제거하라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알리시아의 변호사인 해리 리벨은 합의금은 종종 공개되지 않지만 “이 케이스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병원들에 경종을 울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다른 소송에 인용되기 시작한 알리시아 케이스는 1심 법정에서 병원 측의 소 취하 소송이 기각되고 주 항소법원과 대법원에서 잇달아 소송 속개 결정을 내리면서 매

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양쪽은 2017년 배심원 재판 바로 전날 합의했다.

몬태나에서는 2019년 로드니 노플에 대한 ‘부당한 생명 연장’ 케이스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의료비용 20만9,000달러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이유로 망자의 유산에 20만 달러의 배상을 판결했다. 몬태나에서 있었던 첫 번째 케이스인 것 같다. 다양한 질병으로 심신이 약해진 노플은 헬레나의 대형 병원인 세인트피터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금지 요청과 POLST폼을 작성했었다. 노플의 변호인 단 중 한 명인 벤 스틱스 변호사는 “노플은 살아생전 사람이 받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면서 마지막 가는 길을 제때 갔다면 편안했을 것”이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노플의 담당 의료팀은 노플을 두 번이나 심폐 소생으로 소생시켰다. 그는 산소통에 의지한 채 2년간 고생

하다가 69세로 숨을 거뒀다. 스틱스 변호사는 “마지막 수개월 동안 그는 거의 고통 속에 신음했고 병원 침대에 누워 모르핀 범벅으로 살아야 했다”고 전했다.

비트리스 와이스맨(83)은 2013년 뇌출혈로 쓰러져 메릴랜드 종합병원에 입원한 후 의사로부터 심폐 소생을 받았다. 그녀는 이미 MOLST폼과 사전 의료 의향서에 특히 심폐 소생술을 하지 말라고 명기했었다. 와이스맨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해 2017년 약값과 7년간의 치료비에 도움이 될 만큼의 ‘만족스러운’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았다.

캘리포니아의 강제 집행 케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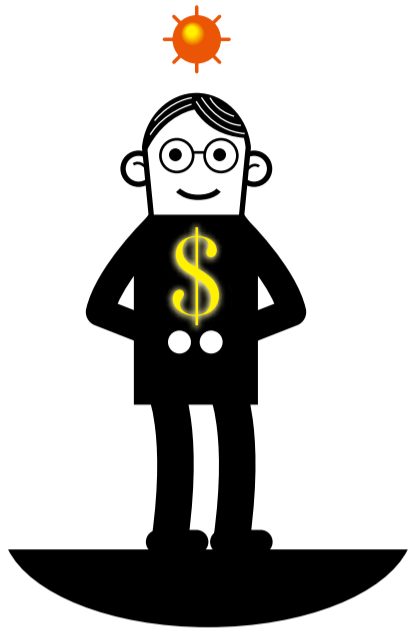
딕 매그니는 말기환자로 한 시설에서 간병을 받았고 의사 역시 그에 따라 치료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험벌트 카운티에 있는 성인 간병 서비스 에이전시에 대해 환

자 방지 혐의가 있다며 신고를 한 것이다. 험벌트 카운티는 매그니의 간병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고 그의 부인으로부터 의료 결정 권한까지 없애 버렸다.

이후 카운티는 입원 초기 그가 거부했던 항생제 투여를 지시했다. 매그니는 2015년 숨졌다. 매그니의 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소송을 제기한 앨리스 잭슨 변호사는 “장기간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 항소법원은 매그니의 부인이 사기를 쳤다는 카운티 정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결국 그의 부인은 변호사 비용 20만달러 이상을 받아 냈고 연방법원에 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카운티로부터 100만달러를 받았다.

카운티를 대변했던 변호사 2명은 현재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로부터 훈육 명령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 학비 보조 신청서(FAFSA)가 간소화(본지 2월호 7면 교육면 참조)되고 보조금 심사도 세분화되면서 저소득 가정의 혜택이 확대될 것이라는 희소식이 전해지자 교육 관련 단체들이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환영만 받는 것은 아니다. 자녀들이 동시에 대학에 다니는 중산층 가정은 오히려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FAFSA 개혁이 교육계의 환영을 받으면서도 일각에서는 중산층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일부는 FAFSA 개혁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더 많은 가정이 FAFSA를 신청해 재정 도움을 받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간소화했지만 정작 신청서 질문이 간소화되면 두 자녀 이상 동시에 대학에 다니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가정에게는 보조금이 줄고 부모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좋아지고 중산층은 불리
 지난해 12월말 연방 의회는 대학 재정 보조를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연방 학생 보조금 신청서’(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간소화하고 무상 학자금 지원금 자격과 연방 정부 보증 학자금 용자를 넓히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 긴급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FAFSA는 대학생과 가정의 재정 상태를 파악해 학생이 공부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학자금 지원 신청서. 학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씩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FAFSA를 작성하지 않으면 학자금 보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2021-22 학년도 FAFSA 제출 비율이 저소득 가정에서 급격히 떨어져 교

FAFSA 개혁

2명 이상 대학생 둔 중산층 부담 늘어나

더 이상 가정내 학생수 고려 안해
 사립대학 ‘CSS 프로파일’ 신청서도 변화 움직임
 “대학생 많은 가정에 보너스는 안돼” 의견도

육계가 우려하고 있다. 이유는 신청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저소득층 가정들이 제대로 작성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FAFSA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 재정 보조를 받지 못한다.

우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라마 알렉산더 상원의원(공화·테네시, 1월 정계 은퇴)은 8페이지에 달하는 기존 FAFSA의 108개 문항을 단 2페이지 36개로 줄이는 개혁안을 의회에 상정해 지난해 연말 의회를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 이 개혁법은 저소득층 가정의 재정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그동안 일괄적으로 적용했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학비 지원 능력 측정 방식을 ‘스튜던트 에이드 인덱스’로 바꾸어 저소득 가정의 학비 조달 능력을 세분화해 극빈 가정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신청서는 간소화됐지만 학비 보조금 계산 방식은 아직도 복잡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번 개혁법에 따르면 가족들이 지원할 수 있는 학비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전체 가족 수를 고려하지만 동시에 대학에 여러 명의 자녀가 다니는 가족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학 재정 전문 웹사이트 ‘Savingforcollege.com’의 마크 캔트로위츠 발행인은 대학에 여러 자녀가 재학중인 저소득 가정에게는 학자금 지원이 다소 올라가겠지만 2명 이상 대학에 재학중인 중산층 이상 가정에게는 학비 지원금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개혁법이 본격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2년이 남았지만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이미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대학 재정 지원 전문 컨설턴트는 온라인을 통해 개혁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계산 방법 바뀌라’ 철회 요청
 캔트로위츠 발행인은 두 가족의 예를 들어 이번 개혁안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



명했다. 맞벌이 부모와 쌍둥이를 둔 4인 가족을 가상해, 부모의 연 수입은 10만달러, 자식이 5만 달러, 그리고 2 자녀의 수입은 연 3,000달러, 자산 7,500달러를 예로 들었다.

기존의 계산대로라면 대학 재학 자녀 수를 고려해 연방 교육부가 제시하는 가족들의 ‘수입 보호 허용금’(income protection allowance)은 2만6,570달러다. 여기에 연방과 주, 근로소득세 등등을 빼고 나면 실제 이 가정의 부모가 지불할 수 있는 학비 조달 능력은 1만4,000달러로 떨어진다. 이 금액을 다시 대학 재학 자녀의 수(앞선 예로는 2명)로 나누면 각 7,000달러가 된다.

반대로 같은 수입의 가정이지만 자녀의 나이가 4살 차이로 대학에 재학하는 자녀가 1명이라면 부모의 학비 조달 능력은 1만2,000달러로 계산된다. 그런데 개혁법에 따라 계산방법이 변하게 된다면 앞선 가정 모두 대학 재학 학생수와 관계없이 부모의 학비 조달 금액은 각 자녀 당 1만2,000달러로 같아진다. 이럴 경우 동시에 대학에 다니는 가정이 조달해야 하는 자녀 학비는 경중 뛰어오른다.

그러나 저소득층 가정에는 큰 변화가 없다.

기존 계산법으로는 쌍둥이 가정의 수입이 5만달러이고 재산이 2만5,000달러라면 부모가 조달해야 할 학비는 855달러이지만 자녀가 한명만 대학에 다니는 가정은 980달러다. 하지만 개혁법 계산으로는 두 가정 모두 부모의 학비 지출금은 자녀 당 435달러로 재학생 수로 봐도 큰 부담이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다. ‘어반 인스티튜트’의 샌디 바움 시니어 펠로우는 여러명이 대학에 다니는 가정이 느끼는 불만은 이해하겠지만 2명이 동시에 대학에 다닌다고 해서 보너스를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아직 연방 교육부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Q&A

FAFSA는 언제부터 바뀌나
 간소화된 FAFSA는 2023-24 학년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22년 10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FAFSA 신청서부터 시행된다.

여러 자녀가 대학에 다녀 조달 능력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개혁법을 공동 발의한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민주·워싱턴) 사무실에서 올린 온라인 요약문에 따르면 대학 자녀수가 보조금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개정된 FAFSA에서도 계속 재학 자녀 수를 묻는 질문 항목을 유지한다.

캔트로위츠 발행인은 확실하기 말할 수는 없지만 각 대학 재정 심의국에 추가 학비 지원을 요청해 볼 수는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CSS 프로파일’을 사용하는 대학의 경우는?

등록금이 비싼 많은 사립대학은 FAFSA와 함께 칼리지 보드에서 주관하는 ‘CSS 프로파일’(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을 학생들에게 요구한다. 대학에서 재정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좀더 구체적인 신청서다. 자녀 여럿이 동시에 대학에 다니는 가정에게는 더 많은 재정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하지만 FAFSA처럼 바뀌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칼리지 보드의 재슬리 카라용 대변인은 “개정된 신청서가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연방 교육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는 기회다” 지금이 주택 사고 팔기 최적기

낮은 이자율로 모기지 페이먼트 부담 없어
매물 부족으로 가격 높아 셀러들은 ‘미소’
“하반기까지 주택 시장 활황세 이어갈 것”

미국 주택 판매가 지칠 줄 모르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속적인 오름세에 대한 경고 또한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혀 없이 낮은 이자율과 코비드-19 감염 우려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 부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금년에도 활황세를 계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미국 주택 판매는 14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례 없는 최저 이자율과 팬더믹으로 인해 재택 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좁은 임대 공간보다는 널찍한 ‘자기 주택’을 찾으려는 바이어들이 크게 늘어났지만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를 맞는 듯했으나 하반기부터 활기를 되찾아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팬더믹으로 인한 실직자 증가와 스몰비즈니스 침체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하반기의 반등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르게 분석했다. 실직자는 저임금 분야에 집중돼 있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고임금 가정의 주택 구입 능력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을 올리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팬더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를 떠나 교외 지역이나 소도시로 이주하면서 인구 이동으로 인한 주택 거래도 활발해졌고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의 이자율로 주택 구입이 더욱 용이해졌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재택률이 완화된 이래 주택 시장에도 또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75만달러 매물이 95만달러에”

전국 부동산 협회가 2월 12일 발표한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주택 판매는 전달 대비 0.7% 상승해 계절 요인 연률이 676만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1년전에 비해 무려 22%가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주택 구입 열풍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분석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주택 건축이나 가구, 가정용품 판매 역시 증가할 것으로 이들은 내다봤다.

그런데 주택 가격은 왜 빠르게 올라가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바이어들의 구매 요구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매물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족한 매물로 인해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고 이로 인해 렌트비 부담이 늘어나자 많은 세입자들이 자기 주택 구입에 나서고 있다.

전국 부동산 협회의 로렌스 윤 수석 경제학자는 “주택 가격 상승에 주택 소유자들은 웃고 있지만 반대로 첫 주택 구입자들은 비싼 가격에 당황스러워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남가주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

튼에서 급매물로 싸게 나온 75만 달러 주택이 95만 달러에 팔린 사례도 있다. 당시 거래를 중개했던 바이어 측 에이전트는 “무려 45명이 경쟁적으로 오퍼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주택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택 판매는 2020년 총 564만 건으로 2019년에 비해 5.6% 늘어났으며 648만 건에 달했던 2006년 이래 최고 수준을 내달리고 있다고 NAR은 밝혔다.

14년전 부동산 버블때와는 다르다

이같은 활황세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요즘의 부동산 붐은 14년보다 덜 위험하고 설명했다. 모기지 대출 기준이 예전에 비해 대폭 강화된 데다가 사려는 바이어보다 팔려는

셀러가 훨씬 적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매물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연방 정부가 실시하는 주택 페이먼트 지불 유예 정책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의 숨통을 터주고 있어 페이먼트가 어려워 포기하는 주택들이 많지 않은 것도 한 이유다.

주택 데이터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코어 로직’의 프랭크 노사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장 큰 요인은 낮은 이자율로 주택 페이먼트 부담이 대폭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프레디 맥에 따르면 2월 11일 현재 30년 모기지 고정 이자율은 2.77%를 기록했다. 1년 전에는 3.6%였다. 또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부족하다. 부동산 업계는 셀러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등의 우려로 주택을 내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NAR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까지 시장에 나온 매물은 107만 건으로 2019년에 비해 23%나 큰 폭 감소했다.

공급 부족 현상 심화

공급 부족 현상으로 신규 주택 건설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 주택 건설의 지표가 되는 12월 주택 착공 건수는 11월에 비해 5.8% 증가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계절 조정 연률을 기록했다. 특히 단독주택 시장에 대한 주택 건설업자의 자신감 역시 지난해 하반기의 가격 상승에 부채질했다.

NAR은 지난해 12월 기준주택 중간가는 전년 대비 12.9% 오른 30만9,800달러로 전달의 31만3,000달러에 육박했으며 2020년 전체로 보면 9% 오른 29만6,500달러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은 올해도 저금리로 인한 활황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백신 접종 비율이 늘어나면 올해 하반기 이후 매물들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분석했다. 패니 매의 덕 던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직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콜드웰 뱅커의 한 부동산 에이전트는 “가격이 저렴한 교외 지역으로 많은 바이어가 모이고 있다”면서 “특히 첫 주택 구입자들은 요즘의 낮은 이자율을 심분 활용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요즘의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또 여러 개의 오퍼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됐다면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팔려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섭 기자



그레픽: 유재일

‘주택 차압 잠정 금지법’ 6월 30일까지 연장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3월 31일로 종료되는 ‘주택 차압 잠정 금지법’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 조치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의 12%가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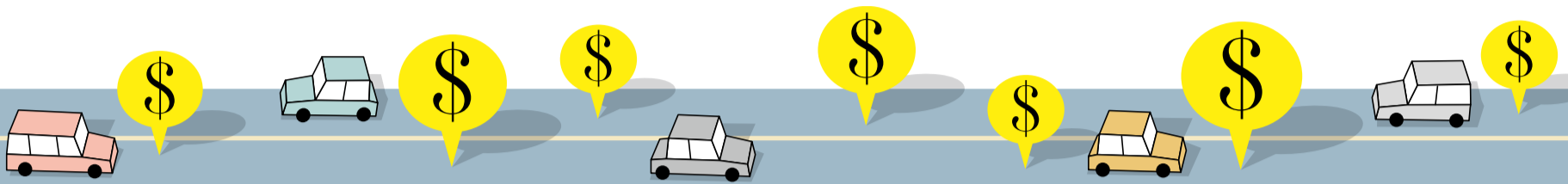
백악관은 16일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와 재향군인부 및 농부부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기지 월 상환금 중지 또는 상환금 하향을 요구하는 주택 소유자들의 요청을 6월 30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6월 30일 이전에 이미 모기지 유예 신청을 냈던 주택 소유

주들에게도 유예 기간을 최고 6개월 동안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이라고 정부는 덧붙였다.

백악관은 1,000만명의 주택 소유자들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바이든의 이번 결정은 팬더믹으로 촉발된 ‘주택 소유능력 저하’ 위기에서 이들 연체자들이 집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고 아울러 밝혔다. 그러나 백악관은 렌트비를 내지 않는 세입자에 대한 퇴거 금지를 연장해 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렌트비 미납 세입자에 대한 연방정부 퇴거 금지 명령은 3월 31일 만료된다. 퇴거 금지 명령은 각 지방정부가 각자 정하고 있다.

<pay-per-mile>

주행 거리 따라 보험료 내는 ‘페이-퍼-마일’ 보험



“적게 운전하면 적게 낸다” 거리+운전 기록 및 습관 기준

운전 거리가 적으면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 팬데믹 시대에 건강과 코비드-19 감염 우려로 많은 사람들이 재택 근무 등 외출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마일리지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자동차 보험을 소개했다.

운전 거리만큼 지불한다

운전 거리만큼 보험료를 내는 보험이 있다. 일반 보험과는 다르다. 일반 보험은 운전 마일리지에 따라 보험료를 낮춰주는 할인 제도가 있지만 이 보험은 거리만큼 보험료를 받는다.

애리조나에 본부를 둔 ‘메트로마일’ (Metromile)은 운전 거리만큼 보험료를 내는 ‘페이퍼마일’ (pay-per-mile) 보험을 판매한다. 기본 월 보험료 29달러에 마일당 6센트다. 마일리지를 속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 없다. 자동차에 내장된 ‘OBD-II diagnostic port’ 라는 분석기로 주행 거리를 정확히 알아 낸다. 이 장치는 1996년 이후 소형 자동차에 내장돼 있는 표준 분석기다. 자동차 대시보드 아래에 있는 장치의 연결 고리에 보험회사의 측정기를 꽂아 두면 된다. 운전자의 나이, 크레딧

기록, 운전기록, 이전 보험 기록, 자동차 종류와 같은 요인들도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주에서 통용되는 보험은 아니다. 현재 이 ‘메트로마일’ 보험은 애리조나를 시작으로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워싱턴에서 판매되고 있다.

‘네이션 와이드’ 보험도 ‘스마트 마일스’ (SmartMiles)라는 이름으로 미국내 40개주에서 판매하고 있다. 기본 요금에 마일 당 보험료를 책정한다. 역시 ‘OBD-II’ 포트 로 주행거리를 계산한다. 거리만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의 스피드 등 기타 요인을 측정해 보험료에 가산한다. 보험 가입자가 가입 첫해에 안전 운전을 하면 10% 디스카운트 받는다. 디스카운트는 다음 보험 갱신 때 적용된다.

운전 거리와 운전 습관에 따라 지불

‘파머스 시그널’ (Farmers Signal), ‘프로그레시브 스냅샷’ (Progressive Snapshot), ‘가이코 드라이브이지’ (Geico DriveEasy)도 마일리지와 운전 습관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는 보험들이다.

주행 거리와 함께 얼마나 자주 과속을 하는가, 급브레이크를 자주 밟는가, 코너

를 돌 때 속도를 올리나 등등. 대부분 보험은 운전자의 셀폰 사용 여부도 추적해 운전하면서 전화를 하거나 텍스트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벌점을 준다. 이들 보험은 처음 가입할 때 10% 디스카운트를 주는데 주에 따라 5% 할인으로 제안하기도 한다. 또 운전 기록에 따른 할인도 제공한다.

운전 기록과 습관은 ‘OBD-II’ 포트 로 측정하기도 하고 일부 보험은 운전자의 셀폰으로 추적하기도 한다. 셀폰의 GPS 기능, 가속계, 평형상태를 측정하는 자이로스코프’ 자력계 기능을 이용한다.

주의점

이런 보험들은 자동차를 모니터 한다. 하지만 주행 거리를 추적하지 자동차가 어디로 향하는지는 추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운전대에 앉는 사람의 운전 습관을 측정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동차의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사생활이나 보험료나 선택은 가입자 몫이다.

일반 보험의 마일리지 혜택으로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 좋은 운전 기록을 유지하고 운전을 적게 하며 디덕터블을 올리는 것도 보험료를 낮추는 한가지 방법이다.

존김기자

은퇴 플랜 여러 개 있다면 RMD 규정 다르게 적용

최소 인출금 12면에서 계속

RMD계산하기

전통 IRA 소유주의 RMD는 다음 3단계로 나누어 계산된다.

- ①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잔고 금액
- ② 생일날을 기준으로 한 IRS 기준표의 수치(대부분의 경우 수치는 27.4부터 1.9까지이며 나이가 들수록 내려가게 된다)
- ③ 구좌 잔고를 기준표 수치로 나누면 받게 될 RMD가 계산된다.

예를 들어보자. 철수 씨는 올해 74세다. 10월 1일이 지나면 75세가 된다. 철수 씨의 IRA 잔고는 현재 22만5,000달러지만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잔고

는 20만5,000달러다. 철수 씨의 IRS 기준표 수치는 74세에 23.8이고 75세에는 22.9다. 따라서 철수씨의 RMD는 $\$205,000 \div 22.9 = \$8,951.97$ 이다. 철수 씨가 올해에 받아야 할 돈은 최소 8,951.97달러다.

영희 씨는 2019년 8월 20일 70.5세가 됐다. 영희 씨는 2020년 4월 1일까지 전년도 잔고를 기준으로 반드시 RMD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영희 씨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2020년 연말 잔고를 기준으로 또다시 RMD를 받게 된다.

한해 두 번 RMD를 받으면 소득이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한 고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첫해 받을 RMD를 다음 해 4월 1일까지 미루지 않는 것도 절

세 방법이다.

또 길동 씨가 2020년 1월 28일 70.5세가 됐다. 길동 씨는 2020년 이전에 70.5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법에 따라 72세가 되는 2021년 첫 RMD를 받는다. 따라서 그는 2020년 연말 잔고를 기준으로 첫 RMD를 2022년 4월 1일까지 받을 수 있다. 길동씨는 2021년 계좌 잔고를 기준으로 2022년 두 번째 RMD를 찾아야 한다.

여러 개의 은퇴 구좌를 가지고 있다면

IRA와 직장 은퇴 플랜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RMD 규정은 다르게 적용된다.

IRA 계좌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각 어카운트마다 RMD를 따로 계산하지만

RMD를 모두 합한 금액을 한 계좌에서만 인출해도 된다.

교사들이 이용하는 직장 플랜인 403(b) 역시 각 계좌에서 별도로 계산하지만 합산 금액은 한 구좌에서 인출해도 된다. 하지만 401(k) 나 457(b) 같은 기타 플랜은 각 계좌에서 RMD를 계산해 각각 인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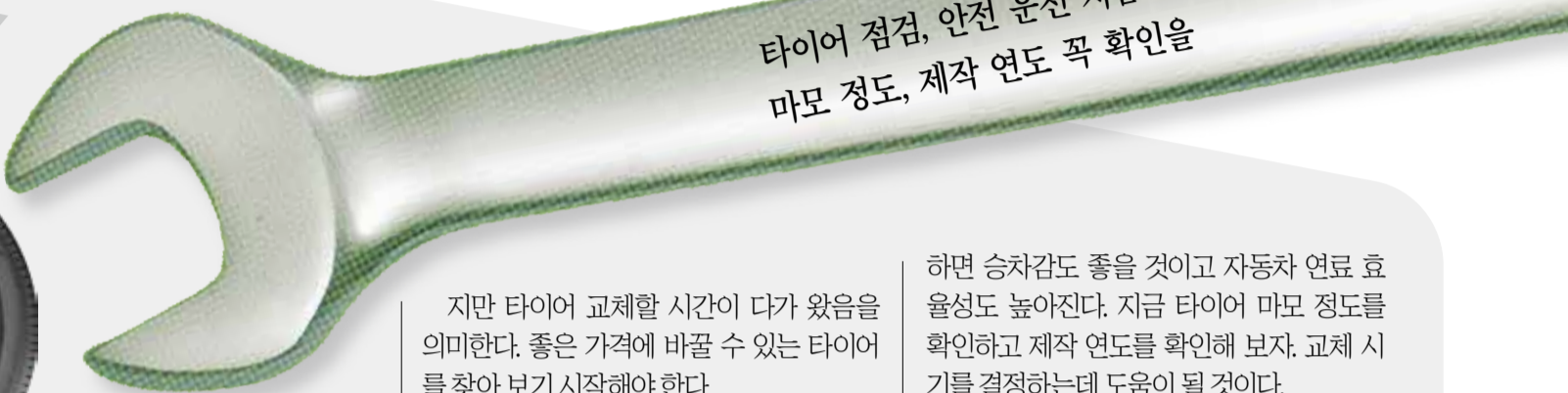
5% 소유주

만약 은퇴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의 지분을 5% 이상 가지고 있다면 회사에서 아직 은퇴 하지 않았다고 해도 70.5세(1949년 6월 30일 이후 출생은 72세)부터 반드시 RMD를 받아야 한다.

타이어 홈 낮거나 6년 지났으면 교체해야



타이어 점검, 안전 운전 지름길
마모 정도, 제작 연도 꼭 확인을



겨울철 날씨는 변화 무쌍하다. 부침이 심한 날씨에는 특히 자동차 정비 상태가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타이어는 사람의 신발과 같아 점검을 자주 해주어야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다음은 자동차 정비 전문 칼럼리스트 필립 리드가 조언하는 타이어 점검법이다.

“겉보기에는 멀쩡하다. 하지만 교체한지 오래됐다. 당연히 바꿔야 한다. 그럼 언제해야 하나?”

타이어는 다음의 두가지 요소로 구별해 바꿀지 결정해야 한다. 1. 마모 정도 2. 제작 연도이다. 타이어 홈이 많이 닳았다면 제동할 때 마찰력이 낮아 제동 시간이 길어진다. 특히 빗길이나 눈길에는 더 위험하다. 마모가 많지 않더라도 최소 6년 이상 지나면 고무 상태가 매우 건조해지고 실금이 가게 되므로 운전 중 높아지는 압력을 견디기 힘들다.

그러면 타이어가 아직 쓸만하고 안전한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자.

우선 장갑을 낀다. 또 자동차 옆에서 봐야 하므로 조명이 잘되고 안전한 장소에 잘 주차돼 있어야 한다.

타이어 홈 깊이 측정

페니 또는 쿼터를 이용해 홈의 깊이를 측정한다고 컨슈머 리포트의 진 피터슨 자동차 전문 칼럼리스트는 조언했다. 타이어 중심의 홈에 쿼터 동전의 조지 워싱턴 머리 부분을 넣어 본다. 홈이 워싱턴 머리 부분에 닿아 있다면 타이어는 아직 양호한 상태다. 하

지만 타이어 교체할 시간이 다가 왔음을 의미한다. 좋은 가격에 바꿀 수 있는 타이어를 찾아보기 시작해야 한다.

페니를 넣었을 때 애브라함 링컨의 머리가 홈에 닿는다면 타이어는 안전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즉시 교체해야 한다.

◇제작 연도로 결정하기

타이어를 얼마나 자주 갈아 줄 것인가는 운전 습관이나 거리가 결정해 줄 것이다. 주행 거리가 많다면 자주 갈아줘야 한다. 또 기후나 도로 상태에도 영향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타이어 홈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해도 6년이 지났다면 갈아 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타이어의 제작 연도를 확인 하려면 타이어 벽의 4자리 숫자를 보면 된다. 첫번째 2 숫자는 제작 해의 주를 말하고 다음 2 숫자는 연도를 표시한다. 예를 들어 '1115' 라고 표시했다면 2015년 11주라는 의미다. 이정도면 오래된 타이어 이므로 바꿔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타이어에 적힌 숫자가 많아 찾기가 조금 까다롭지만 앞에 DOT라는 이니셜이 써 있으므로 어렵지는 않다. 맨 뒤쪽의 4자리 숫자만 확인 하면 된다.

새 타이어 교체를 미루지 말아라

새 타이어 가격이 만만치는 않다. 그러나 교체를 늦추면 안전 운전이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새 타이어로 교체

하면 승차감도 좋을 것이고 자동차 연료 효율성도 높아진다. 지금 타이어 마모 정도를 확인하고 제작 연도를 확인해 보자. 교체 시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타이어는 비싸다. 하지만 점검만 잘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6만마일 정도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타이어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자.

◇타이어 압력 측정기와 공기 펌프 구입

타이어 압력 측정 계이지는 대략 20달러 이하다. 또 복잡하고 사람 많은 개스 스테이션을 찾는 것 보다는 집에서 공기 펌프를 이용해 주입하는 것이 좋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공기 펌프 가격은 대략 75달러 이하이다.

운전석 사이드 도어 옆에서 있는 노란색 스티커에 정확한 타이어 압력이 적혀 있다. 공기 압력은 최소 한달에 한번은 측정한다. 압력 측정은 오후보다는 아침에, 운전하기 전에 측정하면 좋다. 운전을 하면 타이어에 열이 발생해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스페어타이어 점검

스페어 타이어를 점검한다. 스페어 타이어에 항상 올바른 압력의 공기를 주입해 놓는다. 그런데 요즘 판매되는 많은 자동차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다. 대신 비상시를 대비한 공기 주입 펌프와 손상된 부분을 임시로 막아 주는 액상 실란트가 들어 있다.

◇외부 온도 측정

외부 온도가 10도 내려갈수록 타이어 압력은 1평방 인치 당 1파운드의 압력이 내려간다.

여름철에 자동차 압력을 점검했다면 겨울철에는 아마도 자동차 타이어 압력이 낮아졌을 것이다. 타이어 압력이 낮아지면 타이어 마모가 심해지고 연료 효율성도 떨어진다.

◇정기적인 로테이트

타이어 로테이트를 자주해 주면 수명도 길어지고 고르게 마모 된다. 자동차 매뉴얼에 타이어 로테이션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적혀 있다.

메디케어 플랜, 나에게 맞는지 꼼꼼히 따져야

오픈 인롤먼트 피리어스 8면에서 계속

OEP 부활의 의미

정부가 다시 OEP를 부활시킨 이유는 있다. 많은 메디케어 파트 C 가입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플랜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한다. 플랜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적용되는지, 또는 플랜이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또 어떤 가입자들은 보험 에이전트 없

이 직접 플랜을 선택하기도 한다. 플랜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 것이다.

경우에 따라 플랜의 중요한 포인트를 지나칠 수 있다. 자신이 다니는 주치의나 선호하는 전문의가 가입되지 않은 플랜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는 자신이 복용하는 특정 처방전 의약품을 커버해 주지 않는 플랜을 택했을 수도 있다. 특히 가입한 플랜이 코페이를 내도록 하는지도 모르거나 디덕터블 등

의 규정도 파악 못해 병원에서 입원비로 2,000달러를 내라는 청구를 받고 놀라워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 에이전트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도 자신의 파트 C 플랜을 메디케어 보충보험으로 착각하고 있는 가입자도 있다.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어설피게 알아서 생기는 부작용이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잘못 이해하고 선택한 플랜에 갇혀야 하는 가입자들에 한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원래의 OEP로 되돌린 것이다.

해야 할 일

만약 플랜을 바꾸려면 플랜에 대한 정확

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가지 혜택만 보고 플랜을 바꾸다 보면 다른 혜택이 줄어드는 플랜을 선택할 수도 있다. 어떤 플랜에서 어떤 것을 더 주느냐를 보기 보다는 그 플랜이 내게 맞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보험 에이전트와 충분히 상의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플랜을 바꾸면서 주치의나 소속 메디컬 그룹을 변경 할수 있다. 메디컬 그룹의 규모가 어떤지, 주치의가 소속돼 있는지, 진료를 위한 레퍼럴이 용의한 그룹인지 등을 고려해 선택하면 좋을 것이다.

애매한 문구로 의사들 해석하기 어려워

사전 의료 의향서 17면에서 계속

지난 수십여년 동안 인생 말기에 어떻게 해달라는 생전 유언을 작성하자는 캠페인이 꾸준히 전개돼 오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다.

2017년 80만명의 미국인들을 포함한

150 종류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미국인들 중에 45.6%만이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다. 특히 양로원 인구는 겨우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환자 스스로도 혼란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지정해 놓은 의료 결정권자가 죽어버려 사전 의료 의향서가 없어지거나

책상 서랍에 던져져 시대에 뒤쳐지는 내용이 되기도 한다.

폼 교수는 '과감한 치료 없이' 등과 같은 매우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면 의사들이 의향서를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종종, 얼마나 자주 발생하지는 모르지만, 병원에서 환자의 차트에 있는 서류를 무심코 지나치거나 건강관리대리서에 적힌 대화내용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그린 버그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제럴드 그

런스펠드 변호사는 "그들의 태도는 '아마도 다치지 않았다' 라는 식이다"면서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 심적 고통, 많은 고통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4년전 했던 인터뷰에서 폼 교수는 그때는 '부당한 생명연장' 소송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 이후부터 소송을 제기한 몇 건의 고소인이 큰 돈을 받기 시작했고 법원에서 그런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WOORI K FOOD
대한민국
8도 특산물
오픈 예정



강원도 김치 시카고 상륙

 **경상남도**
GYEONGNAM

경상남도 농수산물 독점 판매

(847)910.0407
8526 W Golf Rd, Niles, IL 60714

인터넷 전국 판매망 구축 전국 어디서나 주문가능



우리마을 우리식품

“한국서 선물 보따리가 왔습니다”



비타민 안부러운 건강음료 만들기

팬더믹 시대 “따뜻한 차 한잔 어때요”



레몬·생강·강황 꿀차

팬더믹 시대에 꼭 지켜야 할 건강수칙이 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한다. 그리고 사람 간의 거리는 6피트 이상을 유지한다. 특히 요즘은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2개는 기본이다.

지속적인 운동과 미네랄 섭취로 면역력을 높인다. 물을 많이 마시고 항산화 성분의 보충제나 따뜻한 음료도 잊지 말아야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팬더믹 시대에 비타민보다 더 좋은 건강 음료로 칵테일 음료 전문가 짐 미한의 ‘레몬+생강+강황’ 꿀차를 소개했다.

생강은 수천년 동안 감기와 관절염, 그리고 편두통을 치료하는 최고의 민간 요법으로 꼽힌다. 생강의 효력은 현대 의학으로도 이미 입증된 바 있다. 항산화와 소염 성분이 가득해 구토 증상을 완화시키고 심혈관 기능을 증진시킨다.

생강과 사촌쯤 되는 강황은 카레의 주 성분이다. 강황에는 몸에 좋다는 커큐민 성분이 들어 있어 역시 풍부한 소염 효과와 뛰어난 항산화 효능을 자랑한다.

레몬은 잘 알려진 비타민 C의 보고다. 여기에 감초처럼 첨가되는 고춧가루(cayenne pepper) 역시 소화 기능을 돕고 또 여과되지 않은 사과식초는 몸에 유익



한 박테리아를 포함한다. 달콤한 꿀은 미각을 돋아주는데 으뜸이다.

강황·생강·꿀절임 만들기

- ①싱싱한 강황 쥬 1온스+생강 쥬 1온스+ 꿀 ½ 컵을 잘 섞어 준다.
- ②밀봉한 병을 냉장고 속에 넣고 1주일 동

안 숙성시킨다. 분량은 대략 반컵. 하지만 6잔 이상 따뜻한 차를 만들어 마실 수 있는 충분한 양이다.

음료 만들기

- ①싱싱한 레몬주스 ¾ 온스+사과식초 1 테이블스푼+약간의 고춧가루(cayenne

- pepper)+정향 올린 레몬 한쪽.
- ②레몬주스를 따뜻한 머그잔에 담는다.
- ③숙성을 마친 강황-생강-꿀 절임 ¼ 온스와 사과 식초, 후추를 넣고 뜨거운 물 5 온스를 섞어 잘 저어 다음 레몬 한쪽을 동 띄우면 미네랄 풍성한 ‘달콤살콤’ 건강 음료로 변신한다.

건강보험 가입 기간 5월 15일까지 연장

오바마케어, 팬더믹 시절의 건강 지킴이

전국민 건강보험인 ‘오바마 케어’ (Affordable Care Act Health Insurance) 가입 기간이 5월 중순까지 3개월 연장됐다. 오바마 케어는 지난 1월 31일까지 2021년 건강 보험 가입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이 기간 중 가입을 하지 못했다면 올 연말인 11월에 시작되는 2022년 건강 보험 가입 기간을 이용해야 한다. 물론 혜택은 2022년 1월부터 시작된다. 이사를 하거나 결혼, 이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년에는 무보험으로 지내야 한다는 뜻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월 28일 행정명령을 통해 오바마케어 가입 기간을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추가 연장했다. 바이든은 팬더믹으로 직장을 잃고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수백만명에 달한다면 연

장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직장을 잃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도 지난 가입기간을 놓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도 이 기간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의 가입 연장 기간보다 보름 앞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 연중 가입 기간을 놓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캘리포니아 무보험자는 coveredca.com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 주정부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하지 않는 36개 주 거주자는 연방정부 운영 ‘HealthCare.gov’ 를 통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신디 콕스 ACA 프로그램 디렉터는 “보험 미 가입자에게

한번 더 주어진 아주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카이저 재단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인구 중, 미가입자는 1,500만명에 달하며 이중 900만명은 수입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료로 또는 보조금을 받아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서도 망설이거나 가입 방법을 몰라서 가입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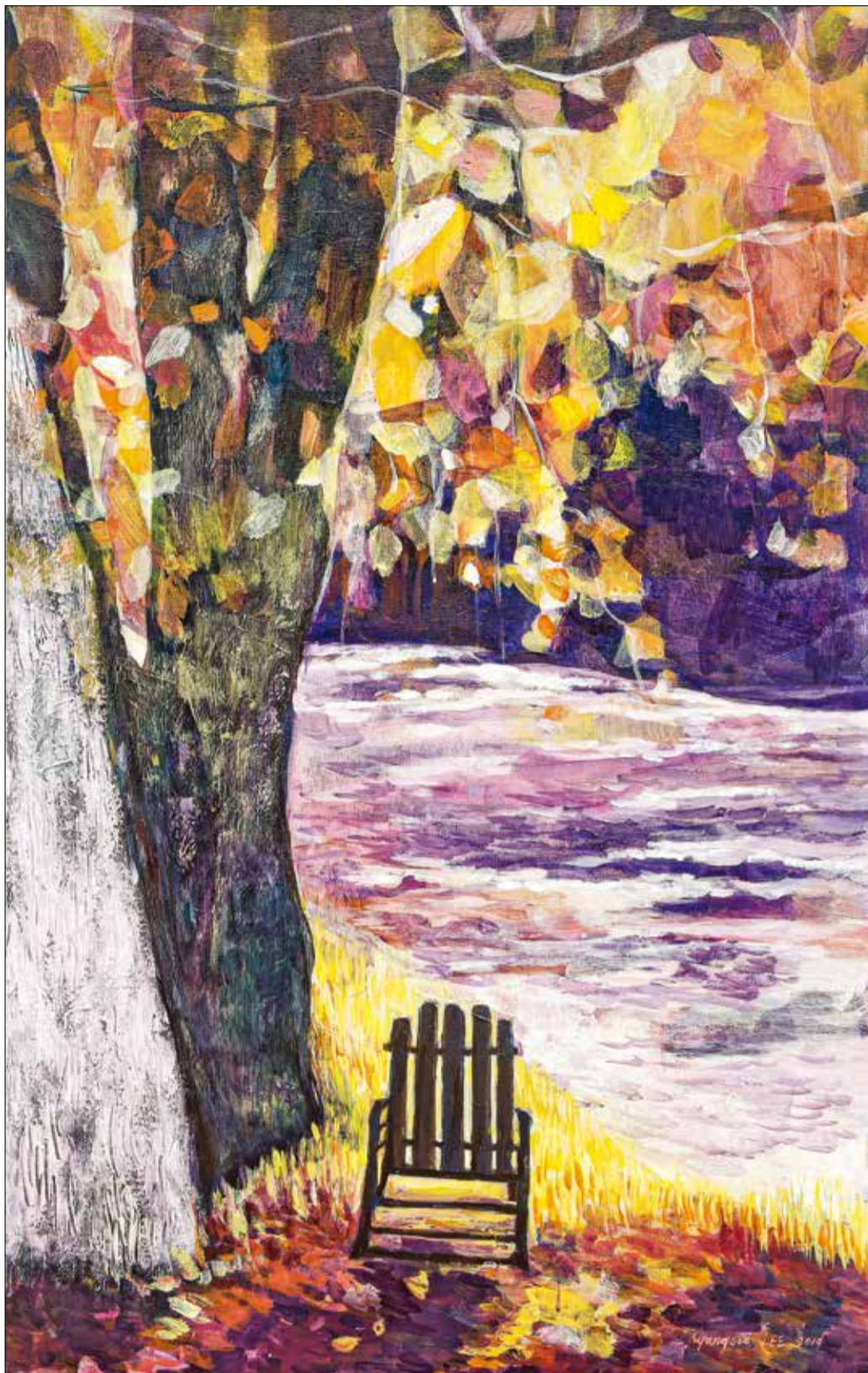
캘리포니아의 경우, 270만명이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120만명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지역별로는 남가주지역에 가장 많은 무보험자가 몰려 있다. LA를 비롯해 인랜드 엠파이어, 오렌지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 대도시 지역의 71만8,000명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또 캘리포니아 가입자의 90%에 해당하는 140만명이 보험료의 평균 80%까지 보조금을 받는다. 이들 재정 보조를 받는 가입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64만명은 2020년 새롭게 출범한 캘리포니아 보조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는 1인 연수입 7만 6,560달러, 4인가족 15만7,200달러 미만까지 정부 보조금을 제공한다. 특히 연방 정부 빈곤선 138% 이하 수입자에게는 무료 건강 보험인 메디칼을 제공하고 있으며 메디컬 대상자는 연중 언제라도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빈곤선 138%는 1인 연수입 1만7,609달러, 부부 2만3,792달러, 4인 가족 36,156달러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확대에 반대하는 주 정부들은 빈곤선 100%까지만 극빈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를 제공한다. 100%는 1인 연수입 1만 2,490달러, 2인 1만6,910달러이며 4인가족은 2만5,750 달러다.



“Journey” 48x30 inches, acrylic on canvas by Kyungsoo Lee



“The Green Boat” 30x50 inches, digital painting by Bruce Thacker

개개인의 길이 다르듯 인생은 정답이 없다...

후회와 미련 갖지 않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얼마만큼 왔을까...

어느 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적지않은 세월을 살았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꼬마가 성장하여 꿈을 향해 바쁘게 달려왔다. 화가가 되고 나니 지나온 시간이 한바탕 꿈속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기만 하다. 인생은 꿈일까? 아니면 미완성을 안고 떠나는 시간여행일까? 한번쯤은 삶의 싹표를 찍어야 하는 시간.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여야 하는 시간이 온 것이다. 생각해보면, 반복적인 삶 속에서도 특별히 생각나고 그리운 것들이 있다. 살아간다는 것, 누구에게나 거의 비슷한 것 같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반반씩 우리 삶의 여정에 함께 한다.

아주 어렸을 때는 누구나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어른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어른이 되고 나면 설익은 어른 흉내를 내면서 어른이 된 양 착각 속에서 한참을 살게 된다. 많은 시행착오와 넘어지기를 거듭하면서 어른이 된 듯하나, 그 또한 삶의 완성을 향한 끊임없는 연습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된다. 우리 개개인에게는 태어나면서 정해진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다 특별하다. 모든 생명체에게는 나름대로 가치와 사연이 숨어있음을 알고 나면 나 자신을 그리 내세울 것도, 또 다르다고 생각할 것도 없다. 단지 달라지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이 정리되면 겸허해지는 공부하는 시간이 된다.

개개인의 가야 하는 길이 다르듯이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흘러가는 강물에 내 몸을 맡기고 유유히 떠나는 것이 인생인 것 같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비바람과 흉탕물 속에서도 시련을 견뎌야 하며, 뾰족한 창칼에 찔려도 그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 그런 연단 속에서 스스로 위안도 찾고, 보람도 느끼며 살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다시 흠으로 돌아갈 때, 모든 수고의 가치에 감사하며 평안의 시간을 맞이하면 그때가 비로소 인생이 완성.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이 되리라 생각된다.

세상에는 그 누구도 완벽할 순 없는 것 같다. 살면서 적어도 후회와 미련을 갖지 않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오늘도 잘 살아준 나 자신에게 수고했다 말하며,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해 본다.



“Sweet Dreams” 67x102 inches, oil on canvas

“철학과 독창성, 작가에 가장 중요한 생명선 같아”

작가의 소신이 나에게 전달되어 울림 주는 작품이 좋은 그림

모든 것들이 너무도 빨리 변하고 있다.

나처럼 세상살이에 한 템포 느린 사람은 요즘의 변화를 따라잡기에 숨이 차다.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새로운 것들의 출몰로 당황스러움의 연속이다. 따라가자니 습득해야 할 것들이 많고, 무시하고 지내기엔 나 자신이 답답해서 싫다. 이래저래 안절부절못하며 지내기 일쑤인 요즘이다.

지난번 한국에 갔을 때 대학 선배가 나를 “이 시대에 마지막 감성이 남아있는 아날로그 작가”라고 지인들에게 소개한 일이 생각난다. 나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살짝 기분이 나빴지만, 생각

해보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다.

그 선배는 최첨단의 미디어와 디지털을 접목해 제작하는 인스톨레이션 작가다. 그의 시선에서 보면 나의 작품들은 상당히 클래식한, 그래서 밋밋하고 고루하게 생각이 들 수 있겠다. 많은 작가는 그들만의 표현 방법이 있다.

세상이 점점 디지털화된다고 해서 내 작품을 완전히 바꾸려고 생각해보는 적은 없다. 선배의 말처럼 나는 아날로그 감성이 맞다. 시대가 요구한다고 해서 내게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긴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시대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내 감각의 변화는 기대해도 될 것 같다. 대부분의 작가는 자기만의 고집이란 것이 있다. 좋게 말하자면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작품에 대한 절대적인 자기의 철학과 표현의 독창성

이다. 작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생명선 같은 것이다.

요즘 미술계에도 많은 작가 수에 비례할 만큼 너무도 다양한 작품들이 많다. 관람자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볼거리에 흥미롭겠지만,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가끔 예술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작품들도 보게 되어 안타깝기도 하다.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정리되지 않은 작품들이 그것이다. 일반인들이 예술작품을 대하는 관점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으나, 내가 생각하는 좋은 그림이란 내 마음 속에 오랫동안 남아서 나에게 감동을 가져다 주는 그림이라 말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작가의 소신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어 울림을 주는 작품일 것이다. 그 표현의 방법과 장르와 관계없이 좋은 작품은 영원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Revolving Melody” 12x36 inches, acrylic & mixed media on canvas

“3월에는 장보러 갑시다”



김동희의
세상보기

커뮤니티 헬스워커

세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

코로나 사태 장기화되면서
대장암 정기검진 늦어져

3월에는 파란색 리본을 곳곳에서 보게 될 지도 모른다. 바로 대장암 인식의 달(Colorectal Cancer Awareness Month)이기 때문이다. 유방암을 생각할 때 핑크색 리본이 떠오른다면 파란색은 대장암을 상징한다.

대장암은 이름 그대로 대장에 생기는 암이다.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으로 나뉘는데 암이 생긴 부위에 따라 결장암, 또는 직장암이라고 부른다. 미국암협회(ACS)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장암은 2020년 미국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세번째로 많이 발생한 암이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2018년 남성과 여성에게 세번째로 많이 생긴 암은 대장암이었다. 평균

20명 중 1명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의료계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장암 정기검진이 늦어지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평소 같으면 ‘대변잠혈검사’나 ‘대장 내시경’으로 정기 암검진을 받았을 사람들이 검진을 연기하면서 병을 키우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2030년까지 4,500명 가량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정기검진을 통해서 조기에 암을 발견했을 사람들이 검사가 늦어진 까닭에 결국 사망에 이르는 예측이다.

그렇다면 대장암 검사는 누가 받아야 하는 걸까. 몇 년전까지만해도 미국에서 대장암 검사는 50세부터 75세의 남녀에게 권고하는 암 검사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새 45세 이상으로 검사 연령을 낮추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45세 이상부터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할 경우 조기발견 가능성과 생존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 덕분이다. 실제로 2018년 미국암협회는 검사 권고 나이를 45세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른 관련 기관들은 50세 이상의 권고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75세 이상인 경우엔 주치의 상담을 통해

수명이 10년 이상 남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5세까지 검사를 권고 받는다.

‘대장암 검사=내시경’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검사를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변검사로도 가능하다. 대신 내시경은 특별한 위험요소가 없으면 10년에 한 번 받으면 되지만 대변검사는 매년 받는 것이 좋다.

바야흐로 파란 리본의 계절이다. 신이 넘어가는 나이라면, 아직까지 대장암 검사를 한 번도 안받아 봤다면, 올해 3월에는 ‘장보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을 어떨까.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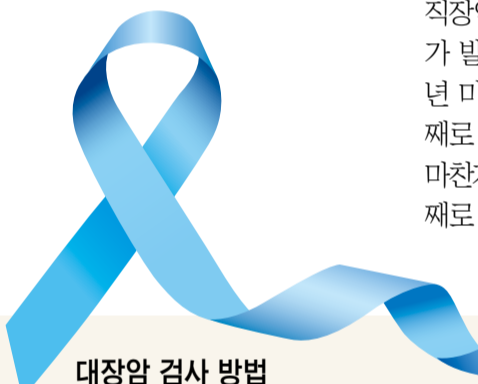
고려보건소 무료 대장암 검사

- 일시: 3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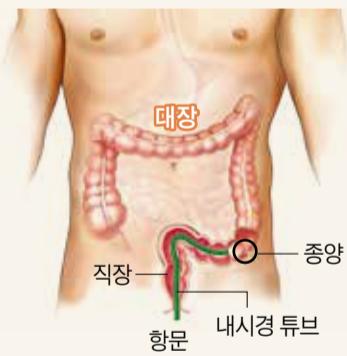
- 대상: 50세-75세인 대장 내시경이나 대변잠혈검사 받은 적 없는 무보험자

- 방법: 예약후 고려보건소를 방문하면 의료진이 상담후 대변잠혈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 검사방법을 따라 대변 채취후 우편 발송이나 보건소 방문. 검사 결과는 개별 통지.

▷문의 및 예약: (310)423-7410



대장암 검사 방법



S상 결장경 검사(5년마다 검사)

- 준비** 검사 전 대장을 깨끗이 청소한다.
- 절차** 의사는 짧고 얇으며, 조명이 달린 유연한 튜브를 사용하여 직장 및 결장의 하부 1/3에서 종양(폴립)이나 암이 있는지 검사한다.



대장내시경(의사 소견이 없다면 10년마다 검사)

- 준비** 검사 전 약물을 사용하여 대장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검사후 운전은 할 수 없으므로 자택으로 돌아갈 교통수단을 준비한다.
- 절차** 검사를 받을 때 더 편안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약물을 투여한다. 의사는 얇고 길며, 조명이 달리고 유연한 튜브로 직장과 결장 전체에서 용종(폴립)이나 암이 있는지 검사한다. 검사 중 용종이나 일부 암을 찾으며 제거한다.



대변검사(매년)

- FOBT(대변잠혈 검사), 또는 FIT(대변잠혈 면역화학 검사)라고 말한다. FOBT에는 화학적 구아약을 사용하여 혈액을 검출하는 방법과 항체를 사용해 대변에서 혈액을 검출하는 대변잠혈 면역화학 검사(FIT)가 있다.
- 준비** 의사가 FOBT 전에 특별한 식이 요법을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 절차** 의사에게 진단 키트를 받아서 집에서 스틱이나 브러시를 사용하여 소량의 대변을 채취한다. 이를 실험실로 보내면 대변 시료에서 혈액 검사를 한다. 혈액이 검출되는 경우 대장내시경으로 후속 검사한다.

그래픽: 유재일

알아두면 쓸모있는 의료 영단어(2)

Colorectal Cancer: 결장/직장암

일반적으로 대장암을 뜻하는 말로 통하지만 정확하게는 Colorectal결장(Colon)과 직장(Rectal)에 생긴 암을 말한다. 대장은 맹장, 결장, 직장으로 구분된다.

Polyp: 용종(폴립)

점막으로부터 병적 또는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온 돌출성 성장물. 모든 용종이 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대장내시경 중 발견하면 제거 수술을 한 뒤 조직검사를 한다.

Biopsy: 조직검사(바이옵시)

세포 또는 조직을 신체로부터 채취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법으로 암을 진단하는 검사법이다. 모든 암은 조직검사를 한 뒤 최종적으로 ‘암’으로 진단한다.

Stool-based test: 대변 검사

Stool은 대변을 뜻한다. 대변 검사가 대장암 검사 방법 중 한가지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장암 검사 방법을 소개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다.

CA LIC. #0672600

• 붕제 협회 • 의류 협회 • 한의사 협회 지정업소 • 미주 한인세탁인 총연합회 / 단체보험 남가주 추천업소



45년 신용과 전통의 한미보험 보험료는 낮추고 보상은 충분하게!

- 사업체
- 종업원 상해
- 자동차
- 주택
- 건강
- 생명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 연금(IRA)
- 학자금 준비
- BOND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늘 함께 있습니다

1972년 시작된 한미보험은 45년간 축적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최대의 효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보험료, 신속한 사고처리, 확실한 보상은 한미보험이 드리는 약속이며 고객들의 믿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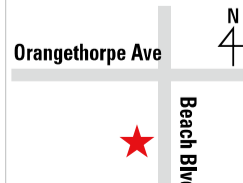
한미보험(주)
SINCE 1972
KORAM INSURANCE CENTER, INC.

www.hanmiinsurance.net

Los Angeles
323.660.1000



Fullerton
714.562.0300



Garden Grove
714.530.5500
Irvine
949.929.8870

Valley
818.383.1111
Fresno
559.233.0099

 NONGSHIM®

SHIN
SINCE 1986



*JUST ACT ON
SPICY INSTINCT!*

